주체90(2001)

6.15 주간

6.15Weekly 제24호 (11월 30일~12월6일)



반동의 역사, 역사의 반동들

잇따른 반북책동, 목표는 남북관계 파탄?

노작 - 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서울대 사이트 폐쇄 사건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회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사퇴하라(전국연합)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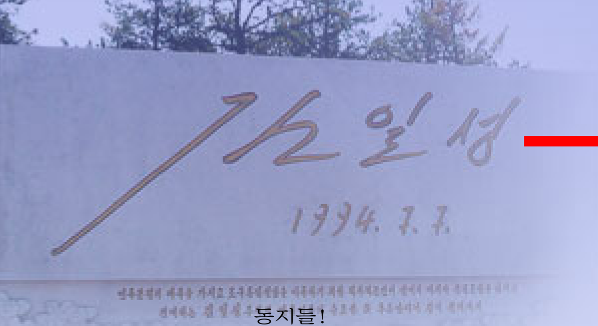
제24호 (11.30~12.6)





4)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주체45(1956)년 4월



동지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도배의 10년 간의 지배가 초래한 죄악적 결과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생활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리승만반동정부가 극소수의 예속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근로대중을 압박 착취하는 반인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미제국주의세력을 적극적으로 부식시키고 있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매국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전쟁도발과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남조선경제를 미국독점자본의 전면적인 지배와 통제 하에 내맡겼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인 괴뢰군대를 발광적으로 증강하며 야만적 파쑈통치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일체 중요 경제명맥과 국가경제생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완전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타국에 대한 미국의 소위 ≪경제원조≫는 그 나라에 대한 군사, 정치적 예속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거니와 남조선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로골적이고 철면피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원조≫는 그의 대부분은 괴뢰군무장과 군사시설에 충당되였고 나머지는 세계 시장에서 남아 돌아 가는 미국과잉상품의 반입에 배당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원조≫를 밑천으로 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일체 중요생산시설과 경제기관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장악하였으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들이 조직한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괴뢰정권의 일체 산업 및 재정금융정책을 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괴뢰정권은 독자적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과 세금 징수안에 이르기까지도 이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도저히 수립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남조선에서 생산되는 중석, 동 등의 전략 물자들과 그의 기업체들을 직접적으로 략탈하고 있으며 기타의 중요 생산시설들은 미국 과잉상품으로 실어 온 원료 기자재에 결정적으로 의존케 함으로써 남조선 산업을 마비상태에 빠뜨렸으며 미국 독점 자본에 전면적으로 예속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산업에서는 그의 식민지적 예속의 기형성이 더욱 심각화되고 있으며 미국상품의 범람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료, 기자재의 가격인상과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중소상공업자들이 대량적으로 파산, 령락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근근히 운영되여 오던 면방직공업조차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면제품강제판매와 원면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부단한 휴업과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이와 같은 ≪경제 원조≫와 예속화 정책은 최대한의 리윤을 그들에게 보장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그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치, 군사적 목적을 용이하게 실현케 하여 주고있습니다.

농촌에서 리승만도배는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영향을 받은 남조선농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지주는 없어지고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혹심한 착취와 억압 하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은 농지댓가상환곡, 토지수득세, 량곡의 강제수매 및 소작료 등의 각종 명목에 의하여 년간 총 수확고의 많은 부분을 괴뢰 정부와 지주에게 혹심하게 수탈당하게 됨으로써 소위 분배받은 토지를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고 한 평의 땅도 없는 소작인, 고농으로 전락되거나 리농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농민들은 각종 가렴잡세와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싼 수입비료의 구입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지주와 부농의 채무노예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총부채는 1954년 11월 현재로 180억 환에 달하고 있는바 이것은 남조선농민들이 매 호당 평균 8,791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남조선경제형편이 이와 같이 만회할 수 없는 난국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승만도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면서 괴뢰군증강과 군사기지의 정비확장을 감행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부패한 ≪미국식 생활양식≫이 지배하며 민족적인 모든 것은 멸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사상과 견해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야당파 내의 ≪정객≫들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박탈되고 테로와 학살이 횡행하는 인민의 감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예속자본의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 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의 궁지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부 인민들은 생존과 자유와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미제국주의와 리승만도배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였습니다.

오늘 비록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이 고도로 앙양되어 있지는 못하나 그들이 북반부에서 달성된 제 성과에 고무되면서 앞으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결정적으로 진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공화국 남반부의 사태는 대략 이러합니다.

조국의 분렬은 미제국주의와 리승만 도배의 압박 하에 있는 남조선인민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고통과 불행으로 되며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와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토선 인민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지주, 예속자본가, 친미파를 반대하고 남반부 인민들을 제국주의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민족적 과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전체 성으로 보아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단계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도는 장기적이고 간고하고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남반부 인민들 특히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 통일독립을 달성하려고 지향하는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 세력을 단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동력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단결된 북반부 인민과 남반력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미제국주의 및 봉건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소자산계급이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념원하는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반제 반봉건적투쟁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과 직접 련결되여 있으며 미제국주의침략정책을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적 자유 독립과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이와 같은 국제적 련대성은 우리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장성강화되는 세계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에 튼튼히 의거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전민족적인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을 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 리승만도배의 반동적 매국정권을 반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현 단계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인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성된 국내외 형편에서 유일하게 가능하고 정당한 로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견지할 것입니다.

정전 후에만 하여도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 남북협상에 대한 제의를 비롯하여 조국전선과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의 성명, 결의 등의 각종 구체적인 조국통일방책들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제의 충복 리승만도배는 자기 상전의 의사에 추종하여 우리의 조국통일방안들을 모조리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도발사건을 계속 일으키며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요구하며 또 다시 동족상쟁을 재발하기 위하여 소위 ≪북벌≫을 공공연하게 떠들고있습니다.

이들은 대대적으로 파쑈경찰기구를 더욱 강화하며 남반부의 일체 애국적력량에 대하여 가혹하게 탄압하며 자기 계열 아닌 모든 당파와 인사들을 국가정치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갖은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승만 도배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반대하고 온갖 매국적 행동을 감행한다고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 학생, 과학자, 문화인, 량심있는 모든 애국인사들이 평화적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며 리승만도배의 반인민적, 매국적 죄악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남반부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세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리승만통치에 대한 불만과 곤경에 빠진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여 나서는 인사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저명한 정치활동가들이였던 김구, 김규식 선생들과 같이 남북조선의 협상을 지지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1948년 4월 남북 련석회의와 같은 그러한 력사적 회합을 가져야 한다는 지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애국적 행동을 열렬히 환영 지지하며 이들과 어느 때라도 련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대처하여 우리는 남반부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도배를 더욱 고립시키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력량의 대렬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충복 리승만도배의 파쑈적 독재하에서 남반부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허용되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당면한 투쟁구호의 하나는 남반부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며 일체 애국적인 정당, 사화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인민에게는 재산의 다소, 지식의 유무, 신앙과 성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등



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함으로써 남조선국회에는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또한 국회는 각계 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광범한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운영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제와 리승만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의 부패한 정치를 개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 역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파탄된 민족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민족산업의 자주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국독점자본의 투하와 외국과잉상품의 강제수입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의 장성과 물가폭등을 방지하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며 그들에 대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토지 및 량곡 수탈 정책과 살인적인 고리대의 착취와 각종 형태의 가렴잡세를 반대하며 매년 증가되는 절량농가, 리농가들을 비참한 처지로부터 구원하여야 하며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이 가지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제독점자본가, 예속자본가들의 압박으로부터 중소상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금의 융자, 원료 구득 및 판매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공통한 목적 밑에 남조선에 있는 일체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련합을 주장하며 또한 그들과 련합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련합을 실현하고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한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며 아직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는 개별적인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 인사들과의 회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련합에 참가하는 사람은 만일과거에 죄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여 줄 것이며 그의 공로와 재능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는 차후 수립될 련합정부에도 참가시켜야 할 것이며 그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남북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와 남북 간의 왕래 및 통신의 교환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반부인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전력과 석탄, 목재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목적 밑에서 북반부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대표단과 개별적 인사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북반부에서 그들의 활동의 모든 자유와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북 간의 접촉을 추진시키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토의하며 그의 실지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기관에는 남북조선에서 동등한 비례로 정부, 최고립법기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무소속 인사들이 참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성된 조건 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만약 쌍방이 조선인민의 념원에 대답할 성의가 있다면 능히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술한 우리의 모든 제안과 주장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정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를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의 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군사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평화건설에 돌리기 위하여 쌍방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남북조선의 어느 한 부분도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인입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단독군사조약을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외국군대를 철퇴시키며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외국의 일체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남북조선 정부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지 조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투쟁의 앞길에는 허다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 세대의 행복과 우리의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쟁로선을 견지하고 이를 위하여 완강하게 싸우는 한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으로부터 더욱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며 또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불패의 력량으로 될 것이며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승리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3. 동녕현성전투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

라자구에 도착한 그날 나는 반일부대연합판사처 동무들의 안내를 받아 오의성 사령의 숙소를 찾았다.

우리는 구면으로서 화기애애한 담화를 하였다. 6월의 첫 담판 때와 같이 서로 상대를 떠보는 담화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담화였다.

내가 라자구로 갈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오사령이 그동안 동녕현성전투를 포기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청천과 같이 우리와의 합작을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의성이 동녕현성전투를 단념하고 우리와 구국군과의 관계를 협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우도록 설유하지 않았겠는가? … 반일부대연합판사처 일군들은 이청천이 항일유격대와 구국군과의 합작이 유산되도록 채세영을 부단히 꼬드기고 있는데 그의 이간질이 오사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몇 차례 통보해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오의성의 통일전선 의지는 여전하였고 동녕현성전투를 잘하여 구국군이 왕년에 당한 패배를 만회하려는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오사령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은 1932년 말에 일본군이 라자구를 ≪토벌≫할 때 받은 타격이었다. 일본군은 그 당시 10여 대의 비행기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구국군을 사정없이 짓뭉개놓았다. 라자구는 잿더미로 변하였고 구국군은 성남촌, 신툰자, 석두하자와 같은 고장으로 쫓겨났었다.

≪수더구를 보면야 사실 우리가 일본놈들보다 더 많았지. 그런데도 우리는 라자구를 내주고 산골로 꽁무니를 뺐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우. 라자구를 타고 앉은 왜놈들이 생사람의 머리를 베서는 남문에 달아매곤 했지만 우리는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산골에만 배겨있지 않았게나. 일본군이 무섭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 이제 동녕에 가면 톡톡히 값을 받아내야지.≫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 오사령은 옆구리의 목갑싸창에 자주 손을 가져갔다. 오의성이 복수심으로 가슴을 불태우



세기와 더불어

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통일전선의 전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징조였다.

그날 나는 반성위와 마주 앉았을 때처럼 오의성에게 나의 지난날을 추려서 이야기해주었다. 오사령도 그 답례로 자기의 경력을 소개하였다. 그의 고향이 산동성 동창 어디라는 것과 그에게 오기성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그때의 격식 없는 한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담화를 하고 있을 때 오사령의 숙소 지붕 꼭대기에서는 2명의 유격대원이 보초를 섰다. 구국군 측에서도 그날은 지휘부 주변의 경계를 물샐틈 없이 하였다.

소문과 같이 오의성은 그날 정말로 범가죽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를 하였다. 몸이 비대해서인지 걸상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 틀을 차리고 담소하는 것은 싫어하였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히 목침 위에 한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의성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점심준비를 잘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식사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 따로 점심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다닌 사람은 얼굴에 마마자국이 있는 중국인 대원이었다. 오사령은 내가 중국말을 자유롭게 하는데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덕으로 터득한 나의 중국말 밑천은 오의성과의 사업에서도 큰 은을 냈다.

왕청중대와 훈춘중대들은 라자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중정치사업 방향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구국군이 장차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번 전투에 달려 있다. 유격대가 선봉에서 잘 싸우면 구국군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면 구국군이 우리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일상생활과 전투행동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투는 총 몇 자루나 쌀 몇 포대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통일전선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이 전투에 통일전선의 명줄을 걸고 있다. 전리품은 구국군이 다 가지라고 하자. 그들이 약담배를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나 정치도덕적 측면에서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다 명심하자….

반일부대의 지휘관들 중에서 동녕현성전투 방침을 제일 적극 지지해 나선 사람은 사충항 여단장이었다. 항일유격대가 라자구에 체류하는 동안 나와 사 여장 사이에는 국적과 소속을 초월한 진실한 우애가 싹텄다. 유격대와 구국군의 대부대들이 라자구를 떠나 동녕현성으로 행군해갈 때에도 그는 줄창 우리하고만 같이 다니려고 하였다. 숙영지도 우리의 곁에 정하려고 하였고 전투시에도 우리부대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하였다. 라자구에서 동녕현성까지 수백 리를 걸어가는 그 나날들에 나와 사 여장은 서로 이해를 더욱 깊이 하였다.

9월초에 라자구를 떠난 원정부대들은 며칠간의 시간을 노상에서 보냈다. 행군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중시하는 계기로 되었다. 항일유격대와 구국군의 정치도덕적 차이는 실생활과 행군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인민의 군대답게 행동하였다. 상공당이 있어도 마스지 않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있어도 손을 대거나 곁눈을 팔지 않았다. 중국인 부락에 들리면 오락회도 하고 선전화도 붙이고 구두 선전공작도 하였다. 다른 부대들이 들면 폐를 많이 끼쳤지만 우리는 도리어 주민들을 도와 물도 길어주고 방도 갈아주고 마당질도 해주고 울바자도 엮어 주었다. 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는 전책도 읽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백성들을 알아보는 좋은 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떡도 치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부대들은 다 성품이 곱지 못하고 행실이 거칠어서 글렀는데 김사령네 부대는 점잖고 싹싹하고 인정미가 넘쳐서 살이라도 떼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인민이 우리를 성심성의로 지지하고 환대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사충항 여단장은 엄지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며 김대장네 군대는 세상에 둘더 없는 신사 멋쟁이 군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김대장이 영솔하는 공산당군대의 모범을 따르라고 여러 번 훈계하였다.

≪지금 어떤 작자들이 행군 선봉에서 구국군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행실이 깨끗해야 하늘도 너희들을 굽어본다. 우리 부대에서 여자들을 희롱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백성들에게 호령질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사충항의 이 말은 그의 부하들에게 효능 높은 각성제가 되었다.

어떤 구국군 대원들은 어두운 밤에 곡식낟가리만 보아도 일본놈 군대라고 하면서 삼십육계를 놓았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되풀이되자 우리는 유격대 대열을 맨 앞장에 세우고 구국군 부대를 후위로 돌려놓았다. 이 별치 않은 조치는 유격대원들을 분발시켰다. 그들은 동녕현성전투의 승패가 곡식낟가리와 일본군을 혼동하는 구국군에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 따라서 통일전선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결정적 힘도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수걱수걱 행군을 다그쳤다.

유격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을 하였다. 때로는 심각한 정치문제를 내걸고 논쟁도 하였다.

≪강동무, 우리가 동녕현성을 왜 치는지 그 목적을 한번 좀 멋있게 말해주게나. 라자구에서 대장 동지가 말씀해주실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그게 알쏭달쏭하거든.≫

원정군이 로흑산에 거의 다달았을 때 왕청중대의 뒷꼬리에서 한 대원이 능청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식정도를 저울질해 보자는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강 동무도 능청스러운 사람이었다.

≪허허, 이것봐라. 이 동무가 남의 불에 게를 구울 작정이구만. 임자 기억이 그렇게두 알쏭달쏭하다면 내가 말해주지. 이왕이면 ≪십진가≫ 곡조에 맞추어 노래로 냅다



세기와 더불어

불러주지.≫

그 대원은 상대가 말할 짬도 주지 않고 정말로 ≪십진가≫를 뽑기 시작했다.

하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실현해야 할
실현해야 할
통일전선 성공함이 첫째이로다
첫째이로다

둘이라면
둘도 없는 혁명성새 우리 유격구
우리 유격구
소만국경 멀리까지 확대함이다.
확대함이다.

서이라면
서리바람 칼칼해도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쏘련으로 다닐 통로 개척하는 것
개척하는 것
…

질문을 제기했던 박 동무는 입을 딱 벌이고 감탄하는 시늉을 하였다.

≪동무 재간은 참 금 열닷 말을 주구두 못 바꿀 재간이야. 나 같은 석두한테두 동녕현성을 치는 목적이 청청하늘의 보름달처럼 제법 석연해지는 걸.≫

왕청중대의 재간둥이인 강동무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도 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착잡한 경위도 ≪십진가≫에 고스란히 펴담을 줄 알았고 9.18사변의 발발로부터 만주국의 성립에 이르는 소름끼치는 정치적 재난 과정도 ≪십진가≫의 선율 속에 재치 있게 함축시킬 줄 알았다.

동녕현성전투의 목적을 알기 쉽게 시화한 강동무의 ≪십진가≫는 왕청중대에서 훈춘중대에로, 훈춘중대에서 사충항여단에로, 사충항여단에서 채세영부대에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몇몇 구국군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십진가≫를 흥얼거렸다. 구국군은 우리 부대의 모범을 따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든 구국군장병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미구에 차례지게 될 전리품의 몫을 그려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활동지역을 소만국경까지 넓혀보겠다든가, 유격대와의 통일전선을 잘하여 만주 땅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숭고한 항일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화제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게, 동녕을 치면 약담배가 많이 생길까?≫

우리 부대의 후위에서 사충항의 부하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글세. 위만군이 1개 연대나 배겨 있다니까 약담배 같은 거야 흔하겠지. 아편 없이야 무슨 위만군이겠나. 그런데 아편을 빨지도 않는 사람이 약담배 소리는 왜 갑작스레 꺼내나?≫

질문을 받은 동료는 미심쩍은 시선으로 짝패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았다.

≪사람두 원, 아편이자 돈이구 돈이자 아편이 아닌가. 허리에 만 냥만 차면 황새 타고 양주로 날아간다고 했네.≫

≪하긴 그래. 항주 구경두 돈 없이는 못 간다구 했으니까. 자넨 만 냥 짜리 아편을 차고 항주도 가구 서주도 가게. 난 그저 일본제 손전지를 하나 얻었으면 하는 소원뿐이야.≫

≪그까짓 손전지 걱정 같은 걸 하지두 말게. 일본군이 득시글득시글 한데 손전지 하나쯤이야….≫

≪희떠운 소리 작작하라고. 아편두 손전지두 다 승전 후에야 생기는 선물이야. 동녕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 떨어질 줄 아나?≫

우연히 얻어듣게 된 이 대화는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연추를 달아 놓는 듯 하였다.

전리품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저 구국군 병사들이 과연 ≪무적황군의 용사≫들과 백병전을 벌일 수 있을까? 중화민국 만세를 부르며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포대앞으로 돌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언행이나 음침한 눈빛에는 어딘가 미덥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우리는 로흑산에서 왕청유격대와 훈춘유격대의 연환모임을 조직하고 다시 한 번 동녕현성전투의 목적과 군사정치적 의의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였다.

그후에는 동녕현성 부근의 고안촌, 오사구 일대에 진출하여 적정을 재확인하고 전투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동녕 부근에서 지하당조직도 찾아냈다. 그것은 일찍이 반성위가 수녕중심현위 서기로 활동할 때 동녕, 고안촌, 신립촌, 로흑산 동지에 꾸리고 지도해온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1932년 봄에 적들한테 노출되어 추적을 당하다가 그 중 일부가 왕청지경으로 넘어오고 일부는 동녕에 남아 지하로 깊이 들어갔다. 반성위는 그때 당원들, 공청원들 뿐 아니라 유격대원들과 일반군중들도 왕청으로 많이 넘겨보냈다.

반성위는 후춘으로 떠날 때 언제든지 동녕 땅에 갈 기회가 생기면 지하에 들어간 당원들과 공청원들을 찾아내어 조직선을 이어주고 자기를 대신하여 잘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 부탁을 잊지 않고 라자구에서 군중정치사업 요강을 발표할 때 주민정치사업을 잘하여 동녕현의 지하당조직을 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을 박아넣었다.

우리는 고안촌 부근에서 찾아낸 몇 명의 당원들로 동녕현지하당을 복구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라자구 지하당에서 하도록 조직선도 이어주었다. 이 지하당 조직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으로 쏘련으로의 통로도 어렵지 않게 개척하였다.

동녕현지하당은 우리가 준 비밀공작 지시를 잘 집행하며 1940년대까지 건재하였다. 소할바령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 밀영과 쏘련 하바로프스크 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변의 훈련기지들을 거점으로 삼고 소부대 활동을 벌일 때 우리는 동녕의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많은 소부대들이 이 통로를 거쳐 국내와 간도로 나오기도 하고 백두산에서 소만국경 지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었던 개별적 공작원들도 연해줄 들어갈 때에는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소만국경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맹렬히 벌이던 전문욱소조 역시 동녕지하당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당시 소만국경을 사이에 두고 동녕현 맞은 켠에서 군사복무를 하였다는 국제주의 전사 야. 떼. 노비첸코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이 이 통로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회상하였다. 동녕의 지하조직들은 대일작전 시기에도 적의 후방교란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동녕현성 해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고안촌 부근 주민들과 지하조직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동녕현성에 있는 위만군 연대장이 비록 만주국에 복무하나 반일감정이 강한 사람이며 위만군과 일본수비대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알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대장은 현성안에 있는 중국인 상점 주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을 말을 잘 듣는다고 하였다. 지하당 성원들은 상점 주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당 성원들이 중국인 상점 주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위만군 연대장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합작에 동의해나서도록 하였다.

동녕현성전투는 1933년 9월 6일 밤에 시작되어 9월 7일 낮에 끝났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하면서 한 전투를 이틀씩이나 끈 실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녕현성을 치는 데서 우리가 역점을 찍은 주공방향은 서문 밖의 능선에 2층으로 축성되어 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에는 여러 정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포대와 일제침략군 부대 본부 사이에는 깊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가 굴설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예비대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 공격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녕현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것도 이 서산포대 때문이었다.

나는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훈춘중대를 짜작골이라는 곳에 배치하고 왕청중대를 주공방향에 진출시켜 서산포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밤 9시 적진에 은밀히 접근한 유격대의 파괴조는 성시공격을 알리는 나의 총성신호와 함께 적포대를 향해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교통호와 지하비밀통로를 통하여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하였다. 적아간에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나는 서문으로 시내에서 돌입한 유격대로 하여금 적 병영을 봉쇄하게 하는 한편 일부 역량을 포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 다음 파괴조를 발동시켜 맹렬한 작탄공격으로 서산포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동틀무렵이 다되어서야 포대는 저항을 중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우리의 주력부대는 일본군 수비대 병영을 강철그물같은 봉쇄망으로 둘러싸고 적의 필사적인 반돌격 시도를 가차없이 좌절시켰다. 일본군은 북문으로 도망쳤다.

편의대로 가장하고 시내에 미리부터 들어가 있던 구국군 부대들과 동문과 남문을 거쳐 성시에 돌입한 구국군 부대들도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전투를 하였다.

위만군 부대 본영에서는 대표를 보내 협동하여 일제침략군을 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 합작이 실현되면 성시가 완전히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채세영 휘하의 일부 부대들이 위만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점을 마구 털고 주민 가옥들에 달려드는 바람에 위만군은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질풍같은 기세로 우리들을 공격하여 나섰다. 일본군 수비대도 이에 합세하였다.

적의 맹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구국군은 일부 부대들이 점령구역을 내던지고 현성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결사적인 시가전으로 점령구역을 확대하면서 적들을 현성 일각을 압축하였다. 구국군도 이에 고무되어 병기공장을 점령하고 군수품 적치장들을 습격하였다. 시가전은 여러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연합작전의 목적이 기본 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인정한 나는 아군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유격대는 시내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현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국군 부대들을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우리가 사충항 여단장이 중상을 당한 채 성시안에 쓰러져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이 때였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사지판에 여단장을 남겨둔 채 성시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부관도 그를 돌보지 않고 살 구명을 찾아 성문을 빠져나갔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전리품 타령을 하던 구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약담배와 일본제 전지를 꿈꾸고 있을 때 나는 약탈과 그것이 전반적인 전투 행정에 미치게 될 후과만을 우려했을 뿐이었다.

그런 약탈은 이미 전투 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가는 놀라운 행실이 발로되었다. 무릇 군대는 상관을 자기 아버지에도 비기고 어머니에게 비기기도 한다. 그러니 구국군은 부모를 사경에 내던지고 도주한 셈이다. 나는 그 때까지 전쟁일화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효막급한 행실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구국군의 약탈행위와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간 불충불효의 행위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이기심과 비겁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전투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 성과는 싸움마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의 생활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전투는 그 일상생활의 반영이고 단적일 표현일 따름이다.

역사는 도덕적으로 낙후한 군대가 승리자의 단상에 오른 전례를 알지 못한다. 히틀러 독일의 나치스 군대가 패전의 시궁창에 구겨박힌 것도 주요하게는 인륜을 저버리고 무한궤도로 선과 미를 짓뭉개버린 도덕적인 패배자들이라는 데 있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운명이 서



산낙일로 된 주되는 이유 역시 그 군대의 도덕적 부패성에 있었다. 일본은 일본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파렴치한 군대로 규탄하며 증오하는 수십 억의 선량한 인민들과 국제적 연합국의 포위 속에서 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처럼 전쟁 마당에 ≪위안부≫까지 끌고다니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한 군대는 세계전쟁사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전쟁행정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도덕 자체를 불필요한 치장품으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오물더미와 같은 것이다.

나는 최춘국에게 사충항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춘국은 그 명령을 결사적으로 집행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해낸 사충항을 등에 업고 그를 화력으로 엄호하면서 부대를 고지쪽으로 무사히 빼돌렸다. 유격대원들은 자기 상관을 내버리고 간 사충항의 부하들을 벼락맞을 놈들이라고 욕하였다.

구국군 대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사실 욕지거리가 나갈 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소행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 사이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녕현성전투의 의의는 비단 적군을 수백 명 소멸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국군이 이 전투까지 겪고 나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일인민유격대는 동만 땅에서 이전날처럼 또 다시 붉은기를 들고 다니며 보무당당히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녕현성전투는 구국군의 의식속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모습을 심어주었다.

그후부터는 중국의 반일부대들이 우리를 해치는 놈들만 있으면 자청하여 따라다니면서 답새겼다.

≪1933년 9월 7일은 내가 두 번째로 생명을 받아안은 날이다. 지금까지의 생명이 부모들이 준 것이라면 9월 7일부터의 생명은 **김일성** 사령이 준 것이다. **김일성** 사령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항일유격대는 우리 구국군의 첫째가는 형제들이다.≫

이것은 사충항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항일유격대가 얼마나 희생정신이 높은 군대이며 얼마나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군대인가 하는 전설같은 소문이 만주 각지로 날아갔다.

동녕현성에서부터 라자구까지 연연 수백 리를 헤아리는 귀환의 길에서도 나는 노상 사 여장의 곁에 있었다. 첫날은 우리가 줄곧 담가를 들고 갔다. 구국군 대원들은 자기네 상관이 유격대원들의 담가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그 곁에 접근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부관들이 대원들과 함께 자기네 사령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쫓아버렸다.

부관이 세 번째로 우리 대열을 찾아오자 나는 구국군에 사충항이 누워있는 담가를 인계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도 지각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제는 자기네 과실을 뉘우치지 않았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담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넘겨준다면 그들이 전장에서 저지를 죄를 다문 얼마만이라도 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원들을 설복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을 넘겨주자 구국군 대원들은 황송하여 절까지 하였다.

사 여장은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간 데 대하여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런 행실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상관의 입장으로 오히려 우리한테 사죄하였다.

≪김사령, 저 미물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대장을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부하들을 잘 키우지 못한 탓이니 허물을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고 우리 부하들을 용서해주시오.≫

나는 그가 부하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사충항이 부하들에게 분풀이를 하였거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였더라면 나는 그토록 감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관치고도 참으로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큰 무관이었다.

≪중국속담에는 단 참외에도 쓴 꼭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 날 다 좋을 수는 없고 꽃도 천 날 다 고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 여장이 치명상을 입고도 원기를 회복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을 사려면 이빨을 보고 사람을 사귀려면 그의 마음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내 김사령과 같은 분을 벗으로 사귀게 된 걸 하늘이 나에게 준 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귀중하게 간직하겠소.≫

사충항은 나보다 나이가 열둬서너 살 더 먹은 연장자였지만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나와 피로 맺어진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었다. 동녕현성전투가 있은 후 그는 부대의 주둔지도 마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북구에 정하였다. 우리는 친척집 문턱을 넘나들 듯이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교를 두터이 하였다.

사 여장의 총상자리를 완치시키려고 나는 그에게 약도 많이 가져다주었으며 그의 사상을 개변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도 많이 주었다. 그런 과정에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고 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도 성장하였다.

사충항은 1934년 6월 라자구 전투에서도 반일연합작전을 위하여 잘 싸웠고 인민혁명군에 편인된 후에는 독립2사 사장으로 적잖은 무공을 세웠다. 그는 전투때마다 맨 앞장에서 싸창을 빼들고 적진으로 돌진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세상에 사 여장 같이 훌륭한 지휘관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구국군 부대 병사들도 사 여장을 무척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런 병사들 중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자기 부대를 탈출하여 사충항의 부대에 넘어왔다.

사충항은 로송령 전투때에도 최선두에서 나가다가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다. 총탄이 배를 관통하지 못하고 속에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쏘련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인차 운명하였다. 사 여장의 추도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애달프게 그를 추억하였는지 모른다.

. . .

우리도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

구국전선 제461호, 주체90(2001)년 12월 1일

선군정치, 선군영도는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일찍이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제도도 있다≫는 총대중시사상을 천명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사중시, 총대중시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시고 선군영도로 낮과 밤을 이어가신다.

이북민중이 아니 우리 7천만 민족이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첫해, 1995년 1월1일 새해 첫날 0시에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님께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고 그 길로 찾으신 인민군 다박솔초소.



이북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가며 어떤 정치를 펼 것인가를 두고 떠들던 세계앞에 나서신 **김정일**장군님의 다박솔초소현지시찰은 주석님서거후 맞는 첫해의 첫 집무활동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 사연많은 장군님의 전선초소길에서 이북민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선군정치의 전면적인 역사가 펼쳐졌다.

그후 장군님의 전선길은 동해기슭의 여성해안포중대에 대한 시찰로, 최전연초소들인 351고지와 대덕산, 오성산, 판문점으로, 조국의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로 종횡무진하여 지난 6년간에만도 14만여리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군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가야 한다 하시며 야전용승용차를 타시고 최전연으로 달리신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리를 달리신 전선길은 그 얼마였던가. 눈내리는 설날에도 인민군병사들을 찾아가셨고 생신날에도 장병들 속에 계시며 초소의 병사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시며 취사장의 밥가마도 열어보시고 침실의 온도와 담요의 두터이도 가늠해 보시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다. 따뜻한 구들목을 좋아하는 여성군인들의 침실은 더 따뜻하게 덥혀주라고 가는곳마다 이르시고 바람세찬 영길에서 만났던 병사가 생각나시어 밤에도 잠못이루셨고 보초근무를 서느라고 장군님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지 못한 병사를 위해 바람세찬 영길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며 장병들과 함께 찍으신 무수한 기념사진들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속삭여주는가.

장군님 떠나 병사가 못살고 장군님 또한 병사를 떠나 못사시는 불같은 혈연의 정이 그대로 어린 뜻깊은 사진들이다.

방파제위에까지 올려미는 집체같은 파도를 헤가르며 초도에로 쾌속정을 몰아가실 때 병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물길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군님, 병사들이 피땀바쳐 건설한 물길굴, 조명도 없고 물까지 차있는 위험천만한 그 물길굴에 들어서시며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병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들딸들이 어떤 장한 일을 하였는가를 알려주어 그들을 고무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걸음, 한걸음 흐린 물속을 헤쳐가신 장군님이시다.

정녕 **김정일**장군님과 인민군장병들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한치의 간격도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의 관계이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군복무시절을 ≪인생의 공백기≫로 여기고 징집을 기피하며 탈영하고 하극상이 비일비재할 때 이북에서는 군복무를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장군님전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되고 있으며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기풍이 전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인민군이 무적필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영도는 오늘 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웠고 이북은 그 준엄했던 제국주의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할 수 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로 이북식 사회주의제도가 수호되었을 뿐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었으며 평화가 수호되었다.

90년대 초 미국의 핵사찰소동과 그후 계속된 미국을 수괴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북고립압살정책과 전쟁도발책동으로 한반도에는 전쟁발발의 엄혹한 위기가 여러번 조성되었었다.

하지만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로 미국의 전쟁음모는 걸음마다 산산쪼각이 나고 말았다. 21세기 첫해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으로 한반도에는 또다시 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그것도 이북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지금 식견있는 정객들과 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시 옳은 말이다.

만약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가 없었더라면 미국주도하의 제국주의연합세력에 의한 북침전쟁이 도발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남북민중 모두가 전쟁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고 여당도, 야당도, 재력가도 누구도 전쟁피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야당과 보수냉전세력 일부에서 남북관계에서 ≪일방적인 퍼부어 주기식≫이라느니, ≪상호주의≫이니 하며 시시비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직시하고 옳게 처신해야 할 줄로 안다.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부터≫

조갑제는 ≪안기부 앞잡이≫, 김현희는 ≪개선장군≫

어느날 가장이 직장에 나가며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신이나 유품 한점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

오는 29일로 14주년이 되는 ≪대한항공(KAL) 858기 사건≫에 대한 재조명 노력이 힘겹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통일부 북한자료실에서 칼(KAL)기 사건과 관련한 비디오 시청 모임에서 만났던 희생자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오랜 세월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알려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일시 : 2001. 11. 19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근처 커피숍
대담 :
차옥정(66세, 희생자 박명규씨 부인)
김호순(55세, 희생자 신태호씨 부인)
김치관 기자
사진 : 조성현 기자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걸 자꾸 느끼게 돼요≫



□ 통일뉴스(**이하 통**) : 사고가 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 **김호순(이하 김)** :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가 없었어요. 집에서 가방들고 나가가지고 안들어 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 **차옥정(이하 차)** : 자료를 줄테니까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젊어서 나라에 몸 바쳤는데 눈송이처럼 산산조각이 났다는 게 어디 있나요. 남편은 전시에는 전투기를 몰게돼 있는 사람인데 유공자 대우를 해줘야죠.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기자와 만나자고 했던 두 사람은 처음부터 격앙된 감정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다.

차옥정씨의 남편 박명규(당시 54세)씨는 18년간 공군에 임관했으며, 중령으로 예편했고 김호순씨의 남편 신태호(당시 47세)씨 역시 소령으로 1980년에 예편했다고 한다. 이들은 예편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로 일해오다가 89년 11월 29일 KAL 858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박명규씨는 미주노선을 운항하는 A300기 기장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KAL858기에 손님으로 탑승했으며, 신태호씨는 KAL 858기 부기장으로 사고기를 조종했었다.

□ 통 : 당시부터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노력해 오셨는데 성과가 없으셨는지요.

■ 김 : 가족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요. 가족들이 서울 사는 사람도 얼마 없고 대부분 시골에 살고 87년도 만 해도 정부라는게 지금보다 많이 뒤져서 정보공유가 안되고 신문지상의 정부 발표만 믿었죠.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걸 자꾸 느끼게 돼요. 83년도에 KAL 007기가 소련의 강력한 미사일을 맞아도 (비행기) 잔해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노무자 가족들은 잘 못느끼겠지만 남편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우리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알고 있죠. 폭약이 미사일보다 강력하지는 않을 텐데 007기는 잔해가 몇 개월씩 (파도에) 밀려나오고 TV에서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858기는 수색도 제대로 안했어요. 대통령선거에 바빠서 위정자들이 노무자들이 탄 비행기 같은 것은 눈에도 없었어요. 결국 찾지 않아 증거가 없어요. 김현희 재판하고 구명정이 나왔다고,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코코섬≫ 부근에서 (구명정이) 하나만 떴는데 말이 됩니까. 김현희 자백하고 구명정만 갖다놓고 재판을 했어요.

사고기 승객 115명은 주로 중동에서 일하고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후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858기 가족회≫에서도 승무원 가족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차옥정씨나 김호순씨는 한목소리로 당시 우리 정부가 수색작업에 소홀하고 진상규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을 정부가 얕잡아 본데 대해 분개했다.

□ 통 : 전번 비디오 시청 모임에서 사고후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 차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공궐기대회라는 것을 연다고 집으로 전화 연락이 와서 진상규명도 안했는데 무슨 궐기대회냐고 안나갔고, 장례식장도 안갔어요.

□ 김 : 나는 TV를 보고서야 알았는데 쫓아가서 왜 여기 와서 반공궐기대회 하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가봐야 끝날 것 같아 가지 않았어요.

■ 차 : 일본, 독일 기자들이 통역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길래 독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기자 명함도 있는데, 실종 2시간 만에 테러로 발표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그래요. (김현희가) 장기영씨 꽃다발 준 사진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거짓이고, 발견된 구명정이 겉은 말짱한데 안에 든 게 그을리고 부셔졌다니...

이야기는 다시 사건의 의문점으로 되돌아 왔고 차옥정, 김호순씨는 칼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전혀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거짓이라며 ≪KAL 858기 가족 의혹제기 33가지≫라는 서류를 한 부 건네주었다. 이 서류에는 칼기 사건과 관련한 33가지의 의혹사항이 담겨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폭약에 의한 폭발이더라도 공중분해까지 약 5분의 시간이 있어 긴급발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는 내용이나, 김현희의 주장과는 달리 김현희 음독후 진찰한 바레인 의사는 위 세척을 해도 독극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혹시나≫

□ 통 :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요.

■ 김 :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했는데 조사결과 발표 그대로라고 해요. 한두번 해보니까 답이 똑 같아 안하게 됐죠. 80년대는 철권통치기라 기자들을 만나 의혹을 제기했고 가족들의 말을 써달라고 했지만 써주는 데가 없어요. 위에 편집에서 짤린다고 그래요.

■ 차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증 써주고 끝나는 거죠. 사실은 87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김영삼씨를 독대했어요. 보상을 이야기 하길래 보상이 아니라 비행기를 찾아달라 했죠. 그랬더니 대통령되면 해결해 주겠다 그랬는데 94년에 (가족들이 갖고있는) 자료를 다 주고 회견문을 만들어 발표하려고 했는데 북한 핵 기자회견과 겹쳐 취소되고 말았죠.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에 해준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한나라당 다 말로는 약속해 놓고는 말 뿐이죠. 의식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 줘도...... 미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돼요.

■ 김 : 미국은 12년이 지나면 문서를 공개한다고 한다던데. 레이건 대통령 때 일이지만 부시가 레이건 때 사람들을 그대로 쓴 아버지가 곤란해질까봐 제동을 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들의 노력은 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해졌고 대선 후보들은 일단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한 듯한 제스쳐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매번 일이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가족들은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귀결점(?)에 도달한 듯 했다.

특히 가족들은 언론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고 몇 년뒤 기체 일부가 발견되어 가족들이 확인차 방콕으로 갔을 때 몇 가지 기체 조각과 옷, 가방들이 널려있었는데 한국일보가 가족들이 희생자를 확인하고 울었다는 보도를 했으나 완전한 오보였다고 한다. 가족들이 한국일보에 몰려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가족들의 주장을 다시 실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묵살되었고 ≪울고 불고, 기물을 부수고...≫ 했지만 결국 ≪기자가 써도 위에서 짤라 버린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 통 : 다른 단체나 기관과 연대하거나 협조를 구해보시지는 않았는지요.

■ 김 : 연대는 안했고 자유민족민주회의 이철승씨는 국제인권위원회에 유능한 변

호사를 연결해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통일연대와는 최근에 연결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거론해 주고 공조해 주니까.
■ 차 : (KAL기 사건관련) 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잡혀 갔다온 학생 만나러 부산대까지 갔다오기도 했는데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웃어요. 명동성당에서도 같이 하기도 했고요.
임수경 엄마도 재판할 때 만났는데 ≪김현희는 가짜야≫라고 하더라구요.

≪조갑제는 안기부 앞잡이≫

□ 통 : 언론인 조갑제씨가 김현희를 면회한 것으로 아는데요.
■ 김 : 김현희를 면담한 유일한 사람이 조갑제예요. 피해자 가족이 면담하자면 신변이 위험하다고 안시켜줘요.
■ 차 : 조갑제는 안기부 앞잡이예요. 기집애(김현희)가 교회로 간증 간다면 나중에 소문 듣고 뒤늦게 쫓아가곤 했는데 한번은 가족들 하고 부딪혔는데 개선장군이더라고. 좋은 옷에 안기부 경호원에 검은 세단에. 지(김현희)는 약을 먹었는데 여기와서 일하려고 (하느님이) 살려놨대요. 안기부 호위가 어마어마하고 가족들 팔을 꺽고 접근을 못하게 했죠.

조갑제와 김현희 대목에 이르자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하듯 말투가 빨라지고 단정적이 되었다. 그들은 아직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불렀다.
월간조선의 조갑제 기자는 ≪김현희의 하느님≫이라는 책 머리글에서 ≪내가 김현희와 나흘간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가족들은 자신들도 못한 김현희와의 면담을 한 유일한 민간인으로 조갑제 기자를 들면서 망설임 없이 조 기자를 ≪안기부 앞잡이≫로 규정했다.
기자가 조갑제 기자를 만나볼 의향은 없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우리를 안 만날걸요≫라고 말하며 얼마전 ≪그 밑에 있는≫ 김성동 기자가 인터뷰를 와서 진상규명부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통 : 사건 후 처리과정이나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김 : 사건 3개월 만에 사망신고를 일괄로 처리해 버렸어요. 내 대신 누가 도장찍으면 가만 안둔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찍고 말았어요. 실종시에는 대한항공에서 월급을 줘야돼는데 아마 대한항공이 83년 경험에서 배운 것 같아요.
■ 차 : (문서를 보이며) 97년에 실종기간을 1년으로 인정받은 행정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테러사건은 시효가 없다고 해요.
■ 김 : 그때 7천 9백만원에 일률적으로 (도장) 찍었어요. 애들 키우고 직장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 차 : 몸져 드러누워 있는데 사람이 사라졌는데 돈가지고 뭐하랴 싶었는데 KAL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가족들은 대체로 사회경험이 없었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수십번의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KAL 858기 사건은 가족들의 합의하에 마무리 된 셈이다.
가족들은 ≪858기 가족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으나 현재는 그것도 내부가 두 갈래로 갈렸다고 한다. 현 대표를 중심으로 보상을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차씨와 김씨 등 진상규명을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 차씨 말에 따르면 대표 선거에서 동수가 나왔는데 재선거에서 한표차로 대표가 됐으니 다른 측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 :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차 : 진상이 규명되고 남편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바로 되길 바랍니다.
■ 김 : 진상규명이 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주간지 ≪시사저널≫ 사무실을 ≪약속없이≫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조만간 대통령에게 전달할 탄원서가 들려있었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9

시민사회단체, 《김현희 KAL기사건 대책위》 결성키로

당시 대법관 이회창, 수사국장 정형근



오는 29일 KAL858기 사건 14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26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87년 KAL 858 진상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대책위원회 구성과 기자회견 일정 등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격려인사를 통해 《14년전, 87년 KAL기 사건은 정체가 분명치 않》다고 규정하고 《전민중이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정부가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한다며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14년간 추적해온 현준희(48세, 전 감사원 직원)씨의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현준희씨는 KAL기 사건은 《북한이 폭파했다》는 7자로 요약될 수 있는데 북한이 했다는 주장과 폭파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정보당국의 발표중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을 꾸몄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는 88올림픽도 300일이나 남아 있었고 거물이나 외국인이 탄 비행기도 아니었다》면서 《그때 북한에서도 올림픽 분산개최를 위해 경기장을 건설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행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에서 한달간 발신음이 나오는데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중공명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의 보잉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장치를 우리정부는 빌리지도 않아 사실상 수색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발언에 나서 피해자 가족은 아랍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113가족이며 현재는 95가족 정도가 연락이 된다고 말하고 당시 재판에서 대법관 중의 한 명이 이회창 현 한나라당 총재였으며, 안기부 수사국장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책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대책위의 명칭을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로 정하고 14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양재동 시민의 숲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이 사건 관련 비디오 시청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7일경에 정식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간 피해자 가족 등 일부에서만 제기되던 KAL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방송(MBC)에서는 지난 두달여간 준비해온 이 사건 관련 방영물을 28-29일경에 내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6

≪추적취재≫ ≪정형근 의혹≫의 증언자들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정형근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원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은 많으나 이번은 사정이 좀 다르다.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의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고문 의혹 등 정의원을 둘러싼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월14일 현재 정의원에게 5차 소환장을 보내 놓은 상태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도 ≪이번 만큼은 정의원이 검찰의 포위망을 빠져 나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신동아≫는 이미 99년 1월호에 ≪정형근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정의원의 과거 행적을 추적취재한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신동아≫는 이 기사에서 ▲홍사덕 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사건(92년 3월)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89년 6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87년 1월) 등에서 정의원이 당시 안기부 수사단장·국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도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의원이 안기부 수사단장으로서 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형근은 ≪DJ와 북한을 엮기≫ 위해 직접 나를 고문했다≫는 서씨의 증언을 통해 고문 의혹을 폭로했다.

특히 ≪92년 총선 흑백 선전물 사건 총감독은 정형근 대공수사국장이었다≫라는 전직 안기부 간부 K씨의 직격 폭로는 홍사덕 의원 비방 유인물사건에 관해 처음 밝혀진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은 세 사건에 대해 각각 ▲≪흑색 유인물사건은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고문했겠나≫ ▲≪박종철군 아버님도 오해 푸셨다≫라는 말로 의혹의 핵심을 피하거나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또 최근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수수 및 고문 여부가 자신의 부산 집회 발언을 계기로 다시 문제가 되었으나, 정의원은 여전히 ≪나는 정치공작한 적도 고문한 적도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의원은 나아가 ≪현 정권이 ≪고정간첩≫(서경원 전 의원)을 앞세워 ≪정형근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정의원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동아≫는 이와 같은 취재결과를 토대로 지난 11~12월 두번에 걸쳐 인터뷰 및 서면 답변을 요청했으나 정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정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인터뷰 및 서면 답변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국정원 ≪정형근 파일≫에 담긴 4대 비리유형
정치공작·용공조작·축소은폐·직권남용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정형근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매우 독특한 이력과 멘탈리티의 소유자다. 그는 1945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수재였던 그는 경남중·경남고(64년)·서울대 법대(68년)를 졸업하고 70년 사법시험(12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군법무관 생활을 거쳐 75년 부산에서 처음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를 검사나 법조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검사(8년)나 변호사(5개월) 생활이 짧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안기부 경력이 강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원은 83년 서울지검 검사를 끝으로 그해 안기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으로 파견나가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85년), 대공수사국장(88), 기획판단국장(93년), 1차장(94년) 등을 거쳐 95년 안기부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연기 검토 문건≫이 폭로되어 옷을 벗기까지 13년 동안 안기부에서 근무했다. 정의원처럼 검사로 안기부에 파견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정의원의 안기부 경력은 공안검사들의 ≪경력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의 독특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잘 나가던 정씨의 안기부 경력은 95년 지자체 선거 연기 검토 문건 폭로를 계기로 끝났다. 안기부의 2인자인 국내담당 차장까지 오른 그가 야당의 문건 폭로로 일격을 맞았으니 그로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의해 안기부장을 눈앞에 두고 물러났다는 ≪피해의식≫을 가졌을 법하다. 국민회의에서는 정형근 의원의 ≪사설 정보팀 운영≫ 건도 이런 피해의식의 발로로 보고 있다.

정권 바뀌면 국정원장 영순위?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의 사설 정보팀 활동은 한나라당의 단순한 일상적 정보수집 활동이 아니다. ≪3년만 있으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누가 신임 국정원장이 되는지 영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공공연한 말로 퇴직한 국정원 직원들을 끌어모으는 등 정권탈취를 위한 공작기구의 성격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공작에 유능한 사람이라도 흔적은 남기기 마련이다. 특히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현장≫에는 ≪업적≫ 못지 않게 ≪과오≫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정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듯, 그가 몸 담았던 안기부와 그 조직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안기부통≫이지만, 역으로 그의 ≪어두운 과거 행적≫을 가장 훤히 꿰뚫고 있는 ≪정형근통≫은 그가 몸 담았던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이다. 안기부 시절 그의 흔적들이 국정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말이다.

▲구미유학생 간첩사건(85년) ▲반제동맹 및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86년) ▲문익환·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89년)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89년) ▲화가 홍성담 사건(89년)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91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92년) ▲김낙중— 손병선 간첩사건(92년) ▲남한조선노동당 및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92년) ▲구국전위 사건(94년) 등이 국정원에 남아 있는 정형근 씨의 ≪업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씨가 수사를 지휘한 이 굵직굵직한 공안사건에서 문익환·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고문·가혹행위나 용공조작 시비가 일었다는 점이다. 정의원 본인은 ≪간첩 잡은 훈장≫을 왜 이제 와서 문제삼냐고 항변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언론이 공(功)만 보도했을 뿐 과(過)를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다.



≪신동아≫가 입수한 국정원의 ≪정형근 파일≫에 따르면, 정형근씨의 안기부 재직중 비리나 물의를 빚은 사건의 유형은 크게 ▲정치공작 ▲용공조작 ▲축소은폐 ▲직권남용의 네 가지다.

국정원의 정형근 파일은 이 네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각각 ▲홍사덕 후보 비방 흑색유인물 살포 사건(92년 3월) ▲서경원 의원 ≪간첩≫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 1) ▲직원을 동원한 사적 업무 수행 등을 들고 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홍사덕 의원 ≪흑색유인물≫ 살포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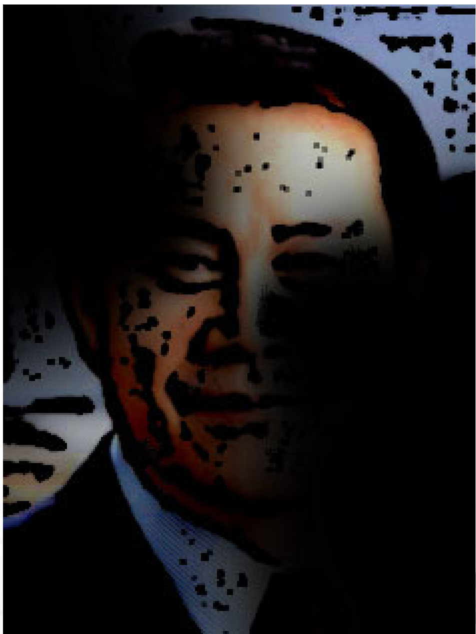
92년 3월 14대 총선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재임중 강남을 선거구에서 여당인 민자당 김만제 후보와 민주당 홍사덕 후보가 경합하게 되자, 홍사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부 지시도 없이 당시 수사과장에게 홍사덕 후보의 여성편력 비방 유인물을 제작해 살포토록 지시하여 ▲당시 수사계장 한기용 등 4명이 홍후보의 축첩 관련 비방유인물을 제작해 3월21일 야간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 단지에 살포하던 중 홍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각되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후보자 비방)로 구속되자 ▲부하 직원 한기용이 민자당원인 친구의 부탁으로 행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소조작 후 직속상관인 소속 과장과 단장을 견책 등 징계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사건 직후 소속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격려금을 자신의 명의로 관련자 한기용 등 4명의 순화 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활용했는 바 ▲그 결과 유인물 살포를 지시받은 한기용 등 부하 직원 4명은 사법처리(각각 징역 1년6월~8월, 집행유예 1년6월~3년)되어 직장을 떠났음에도 ▲정형근 자신은 동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은폐조작 후 충성심을 인정받아 수사차장보로 영전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음.

서경원 의원 간첩사건 및 가혹행위

89년 6월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 서경원(62)은 85년 4월경 서독 여행중 북한공작원 성낙영에게 포섭되어 88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북한 특별기편으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되었는 바(서경원은 그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8년 3월 특별사면 때 잔형집행면제로 출소) ▲**김일성**과 허담 접촉 및 공작금 미화 5만달러를 수수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국회와 가톨릭농민회 등을 기반으로 간첩활동을 자행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정형근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서경원 간첩사건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주먹과 발로 서경원의 머리, 가슴, 얼굴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구두를 신은 채 발등을 짓밟는 등 가혹한 고문을 통해 ▲허담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김대중 총재에게 건네준 사실과 김총재가 **김일성**에게 친서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김대중 총재에 대한 용공조작을 자행했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 ≪민추위≫ 사건 관련 박종철(언어학과 3년)을 연행해 조사시 물고문 등으로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치안본부로부터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소집 등 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대공수사국 수사단장 정형근은 ▲1월14일 심야에 당시 광화문에 있는 서린호텔에서 개최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검찰·경찰·청와대 관계자 등 1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발표문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그후 수차례 시내 앰버서더호텔(1817호)에서 검찰·경찰·청와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정부가 견디기 힘들다, 5공 정권 출범 이래 최대 위기인만큼 사건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며, 이대로 묻혀야 한다≫며 사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담당검사 안상수에게 고문경찰관의 구형량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등 고문치사 사건 은폐 및 축소조작에 개입하였고 ▲당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조한경 경위를 직접 찾아가 ≪두 사람만 관련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 달라≫면서 금품을 제공해 회유하고 검찰·교도소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음.



위에서 인용한 ≪정형근 파일≫의 일부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일 뿐이지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 또 이것이 그의 ≪전력≫의 전부도 아니다.

이를테면 ▲구미 유학생 간첩사건 ▲반제동맹 및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 ▲화가 홍성담 사건 ▲사노맹 사건 ▲김낙중－손병선 간첩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에서 하나같이 고문 및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국정원의 정형근 파일에는 고문·가혹행위 유형과 사례를 따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용공조작 유형 사례로 예시한 서경원 간첩사건에서만,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련성 때문인지 몰라도 일부 가혹행위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고문·가혹행위의 경우 당시 정형근 수사국장(단장)의 지휘 아래 가담했던 관련 당사자들이 상당수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누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형근 파일≫에 담긴 정보는 부분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실 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 내부에서 수집한 정보라는 점에서 일단 이를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보았다(물론 정형근 의원에게도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아울러 ≪정형근 파일≫에는 없지만 고문·가혹행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취재했다.

(후략)

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신동아 2000년 1월

≪조갑제씨는 안기부 안가에서 나와 함께 수사발표문 손봤다≫

녹음인터뷰 제2의 증언자 - 이선실 사건 수사발표문 작성팀 안기부 직원 A씨

A씨는 92년 당시 안기부 이선실사건 수사발표문 작성팀 소속. 조갑제씨와 함께 엠베서더 호텔 방에서 7시간 동안 발표문을 다듬었던 ≪두서너명의 안기부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권언유착 현장의 생생한 증언.

아래 인터뷰는 제2증언자 A씨의 녹음 육성이다. 지난호에 등장했던 취재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A씨는 92년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문 작성팀 소속으로 조갑제씨와 함께 엠베서더 호텔 방에서 7시간 동안 발표문을 다듬는 작업을 직접 했던 ≪두서너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권언유착 현장의 생생한 증언자다. 그의 증언은 우리가 지난호에 제기했던 조갑제 편집장의 중대혐의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인터뷰는 지난 12월초 본지 기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녹음을 허락했다. 녹음 그대로 전하기 위해 가급적 설명은 생략한다).

1.≪조갑제와 우리 수사발표문 작성팀은 92년 10월 4일경 엠베서더 호텔 룸에서 저녁 7시쯤 만나 새벽 2시까지 공동작업을 했다≫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이선실 사건 수사 전모를 발표한 것이 92년 10월 6일이지 않았습니까. 조갑제씨와 함께 수사발표문을 다듬는 작업을 엠베서더 호텔에서 한 것은 며칠 경이었습니까.

첫 질문을 받은 A씨는 ≪그게 몇 년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금 물으니까 생각을 해 본다면≫하면서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수사결과 발표문이라는 게 조사된 방대한 내용을 종합하고 요약해서 만드는 것이라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에요. 그걸 발표일자에 맞추다 보면 적어도 우리 손에서 떠나는 것이 한 이틀 전쯤은 되어야 하니까 그 엠베서더 호텔에서 작업한 날은 10월 4일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엠베서더 호텔 몇 호실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요.≫

그는 몇 층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룸이 두 개 있는 곳이었다고 했다.

—그게 수사팀 안가로 활용되었던 거였죠.

≪안가였죠.≫

—안기부측에서 몇 명 정도가 작업을 같이 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수사결과 발표문 작성 멤버들이 같이 했어요. 근데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두서너명이었다≫고 답했다.

—그때 참여한 안기부 직원들은 수사팀 소속입니까, 홍보팀 소속입니까.

≪그때 우리는 수사팀이다, 홍보팀이다 그런 구분은 없었고 그냥 발표문을 만드는 사람들, 발표문 작성팀이라고 해야죠. 일원 중에는 상급자가 한 명 있었죠.≫

—조갑제씨는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면 월간조선의 다른 기자들과 같이 나왔습니까.

≪혼자 왔어요.≫

—조갑제씨는 누가 연락해서 그쪽으로 오게 된 겁니까. 정형근씨가 직접 연락을 한 겁니까.

≪그 경위까지는 내가 실무자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지요.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 정형근 국장으로부터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놨습니다. 그걸로 봐서 사전에 정형근 국장하고 조갑제 기자하고 둘 사이에 연락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몇 시쯤에 조갑제씨랑 만났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말하기 좀 그런데, 저녁에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한 기억은 없네요. 7, 8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갑제씨를 엠베서더에서 처음 만날 때 룸에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로비에서 만나서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먼저 룸에 들어가 기다렸을 겁니다.≫

—처음 볼 때 인상이 어땠습니까.

≪이름만 들었지 그때 처음 봤는데 머리가 많이 쉬었대요. 뭐라 해야 되나, 소설가 같은 인상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을 조용조용하게 하대요.≫

—작업은 몇 시에 끝났습니까.

≪그때가 새벽쯤 됐을 겁니다. 아무튼 12시 넘기고 1시도 넘겼습니다. 새벽이었는데 그게 몇 시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작업을 다 끝내고 거기서 잤나요 아니면 각자 흩어졌나요.

≪우리는 또 돌아와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조갑제씨는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 시간에 어디를 가겠어요.≫

2.≪안기부의 초안 위에 원고 교열보듯 감수, 어떤 페이지는 많이 고치고 어떤 페이지는 한두 구절로 그치고. 서로 농담없이 일만 했다.≫

—수사 기초자료를 읽고 수사발표문을 작성하기까지는 며칠이나 걸립니까? 대략.

≪며칠이라고 산정할 수는 없지요. 상당 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료를 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읽어봐야 합니다. 검찰 가서 수사자료 같은 거 열람해 보시면 피의자 한 사람에 대한 진술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피의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한 개라도 안 읽어보면 정확한 내용을 발췌할 수도 없고 또 발표문이 허술해지니까 다 읽어봐야죠. 그런 다음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점을 만들어 하나의 발표문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당시 수사발표문은 총 세 권이었습니다. 한 권은 본 발표문이고 두 권은 보조자료입니다. 아까 수사발표문 작성 작업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하셨는데, 조갑제씨와 함께 검토한 것은 그 세 권 모두입니까 아니면 본 발표문 한 권이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본 발표문만 다뤘습니다.≫

—보조자료는 다른 데서 했단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해가지고 그냥 내부에서 끝내는 거죠. 보조자료는 발표문처럼 사건을 종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관련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증거 같은 것을 모아놓은 간단한 거니까요.≫

—본 발표문은 안기부에서 초안을 다 만들어놓은 것을 조갑제씨가 본 겁니까.

≪그렇죠. 우리 선에서 초안은 다 됐죠.≫

—초안이라면 어느 단계였습니까. 표지까지 다 있는, 발표장에서 바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요.

≪그렇죠. 완벽한 작품이다 하는 것을 내놓은 거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허술하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서는 안기부팀은 발표문 작성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조갑제씨가 코치하고 고쳐주고 그런 작업을 위한 날이었군요.

≪그렇죠. 조갑제 기자하고 우리 발표문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만 만나서.≫

—조갑제씨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줬습니까.

≪그게 인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만든 초안,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우리한테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했죠. 우리가 수사관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장이 딱딱하고, 수사전 문용어 같은 거 쓰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내용이나 용어 같은 거를 다듬으면서 손질을 했죠.≫

—손질을 해줬다는 게 초안 위에 적으면서 원고 교열보듯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초안 위에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갑제씨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나요. 어떤 대목을 강조해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초안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완전히 거짓말을 쓰거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또 그걸 개작한다는 게 사실 시간상 불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개작을 하면 우리에 대한 예우도 아니겠죠, 그게.≫

—그래도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법도 한데요. 이 대목이 강조되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저래야 한다든가.

≪글쎄요. 그런 기억까지는 잘 모르겠고. 문장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서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기억이 나요.≫

—작업 도중 조갑제씨가 질문 같은 것도 했나요.

≪사건내용 중 모르는 대목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고 우리가 이건 이런 거다 설명하고.≫

—조갑제씨는 고쳐주면서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은 안보였습니까. 뭐 이렇게 딱딱하게 썼느냐는 식의.

≪그런 것은 없었어요(웃음). 자기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조갑제씨가 어떤 대목을 구체적으로 고쳐줬는지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까.

≪(웃음) 아, 너무도 오랜 세월이라.≫

—한 페이지당 대체로 한두 구절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각 페이지마다 좀 틀리겠죠. 어떤 페이지는 좀 더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페이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한두 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쓴 거보다는 조금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이 읽거나 보기에 좀 쉽겠다 생각했죠.≫

—그날 저녁 호텔방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조갑제 기자라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사실 수사국 사람들은 그런 쪽 사람들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발표문 작성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발표문 작성하는 데만 서로 열중했던 것 같아요. 무슨 농담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기부에 홍보전문가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외부 언론인을.

≪공보관계팀이 있긴 있었는데 기자 출신들은 들어와 있지 않았지요.≫

—그럼 이선실 사건 같은 큰 수사를 발표할 때마다 언론인한테 감수받았나요, 그게 관례였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처음일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적 없었습니다.≫

3.≪왜 하필 조갑제씨였나?≫≪정형근 수사국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수사발표문을 감수해준 언론인은 조갑제씨가 처음이었다.≫

—많은 언론인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조갑제씹니까.

≪그 관계야 우리는 실무자니까 알 수 없고, 안다면 그거는 정형근 국장이 알겠죠. 실무 차원에서 그것까지 알 수 있겠나요.≫

—그 작업을 하면서 조갑제씨가 정형근 국장과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암시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조갑제씨도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제공받는다든가, 돈을 받는다든가. 조갑제씨의 노동의 대가는 뭡니까?

≪아 참(웃음).≫

—그렇게 바쁠 때, 10월 4일경이면 월간지도 슬슬 마감하느라 바빠질 땐데 호텔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일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참 그건 실무 차원에서 알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때 조갑제씨에 대한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간첩 잡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알기로는 돈도…….

≪돈이라고 하면 수고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단 외부에서까지 와가지고 수고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 차원에서는 그 수고비를 줬는지, 줬다면 누가 얼마를 줬는지 알 수 있는 위치는 못 돼요. 다만 외부에서까지 와서 했으니까 수고비를 줬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은 가죠. 안다면은 우리보다는 윗선에서 알겠죠.≫

—윗선이라면 호텔방에 없었던 사람인가요. 현장에 있었던 상급잔가요.

≪아니, 우리 발표팀 말고 그보다 더 상급자. 지휘체계상으로 보면 상급자들이 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말≫에 조갑제씨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보셨나요.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스토리가.

≪글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수사발표문과 관련한 대목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틀린 부분은 어떤 겁니까.

≪틀린 부분? 틀린 부분이라기보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언제쯤 정형근 수사국장으로부터 조갑제씨와 함께 그런 일을 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하루 전쯤이었죠.≫

—정형근 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통보를 해주던가요. 초안을 수정해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월간조선의 조갑제 기자라고 있는데 한 번쯤 만나서 요걸 좀 더 다듬고 하는 게 좋겠다, 같이 만나서 해라 그런 지시였죠.≫

4.≪정형근 수사국장은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에게 한번 보여주고 다듬는 게 좋겠다≫고 우리팀에 직접 지시했고, 조갑제의 수정안을 받아보고 만족해 했다.≫

—A씨는 그런 지시를 정 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어요, 아니면 상관을 통해서 받았나요.

≪우리 발표문 작성팀이 정형근 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반론 같은 건 있을 수 없었겠죠. 뭐 이런 걸 기자에게까지 코치받습니까 우리가 하지, 그런 식의.

≪(웃음) 참 우습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질서가 있고 지휘가 이루어지는 계통이니까 거기서 나는 못 한다라면 되겠습니까(웃음).≫

—당시 조갑제씨는 그래도 ≪대기자≫로 인정받고 있던 때였는데, 언론인을 불러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게 그 언론인한테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형근씨한테 물어야 할 질문이긴 하지만.

≪언론인이 해준 게 그 당시에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무 차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기자까지 와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었죠.≫

—언론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 상하진 않았습니까.

≪뭐 일인데 그렇게 크게 자존심 상할 거야 없겠지만 우리가 해도 되는데 기자까지 불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씨는 자기가 수사발표문 일을 맡은 5~10년간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정형근 국장은 그날 엠베서더에 들르지 않았나요.

≪안 왔어요. 우리가 다 끝내가지고 가서 그걸 수정해 다시 만들어서 정형근 국장에게 보여줬지요.≫

그는 호텔방에서 작업하던 안기부원 외에 몇 명이 더 호텔과 안기부를 오가며 작업을 도왔다고 했다.

—정형근 국장은 조갑제씨가 수정한 것을 받아봤을 텐데, 만족했습니까.

≪우리 생각이랑 비슷했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죠.≫

—조갑제씨가 고쳐준 대목을 그대로 다 수용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자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 들어와서 조금 우리와 안맞는 부분 같은 거는 우리가 다시 손보고 그랬죠. 거기에 정형근 국장도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조금 보

돼고 그래가지고 완성되었죠.≫

—조갑제씨는 수사발표문 감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국장과 이념도 같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한 번 봐줬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지만 자신의 개인의 신상에 부담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A씨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사발표문을 정형근 수사국장이 92년 10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할 때 발표문 작성팀 모두가 현장에 나가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발표현장에서 조갑제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기자가 ≪난 자리에서 열심히 받아적고 있었다≫고 했더니, 그는 ≪그때 우리가 만날 뻔 했구만≫하고 웃었다.

5.정형근 의원은 97년 가을 동아일보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갑제씨는 우리 수사발표문을 손봐줬다≫고 말했다.

증언은 또 있다.

정형근 의원은 ≪말≫의 지난호 보도내용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언론인에게 ≪중대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동아일보사의 한 기자가 정형근 의원을 만난 것은 97년 가을이었다. 그는 정당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매일 여의도에서 살다시피 했다. 이 기자는 어느날 정형근 의원실에 들렀다. 정 의원에게 ≪안기부의 중요 직책에 근무하셨으니 대북정보가 많을 텐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정 의원은 ≪그래야죠≫하면서 ≪기자들 중에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 기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러면서 조갑제씨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조갑제씨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기부)재직 시절 조갑제씨는 우리 수사발표문도 손질해주고 자문도 해줄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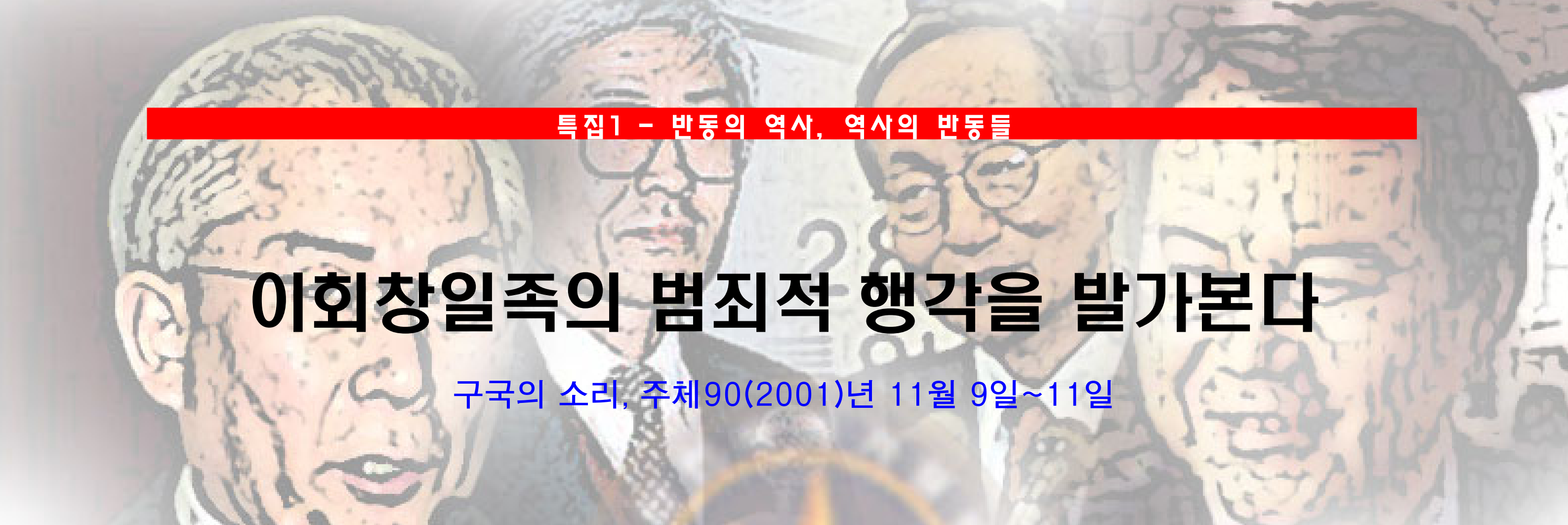
—정 의원이 언급한 발표문은 이선실 사건 수사발표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형근 의원이 재직중 발표했던 중요 수사는 그것뿐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정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기 전에도 그 사건 때 조갑제씨가 안기부쪽과 라인을 갖고 같이 기사를 쓰다시피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정보기관과 기자≫ 시리즈는 조갑제 편집장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자윤리다. 정보기관과 기자의 바람직한 거리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언론계에 하나의 주제를 던지는 일이다. 그 주제의 가장 대표적이고 적절한 연구대상이 바로 조갑제 편집장이라는 사실을 한국언론계는 이의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기자는 조갑제라는 ≪기자≫와 ≪정보기관과 기자≫라는 주제를 오래전부터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그가 편집장으로 있는 월간조선이 여러 인물을 검증해왔듯이 그도 검증을 받아야 세상은 공평하다. 이 주제에 대한 언론학자를 포함한 언론계의 지속적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오연호
≪말≫ 제151호, 1999년 1월



이회창일족의 범죄적 행각을 발가본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9일~11일

싸리 그루터기에서는 싸리가 돋고 독버섯밭에서는 독버섯이 돋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대를 이어 역적질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과 같은 인사들을 비유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겁니다. 김현규씨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친미행적과 이회창의 반민족반통일행적, 친미행위 등을 거론하며 그가 정계에서 조속히 물러날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을 일으킨바 있지만 이홍규는 8.15광복이전에 일제의 검찰기관 서기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데 직접 관여했던 철저한 친일주구였습니다.

8.15광복과 함께 마땅히 처단됐어야 할 그는 광복직후에는 친미분자로 둔갑해 미군정청이 임명하는 검사로 복무하며 애국자들을 학살하기 위해 광분했습니다. 그리고 50단선이후 1965년까지 이승만독재정권과 박정희군사정권하에서 서울지검검사, 서울고검판사, 광주지검장, 법무부조정국장, 대검검사 등을 전전하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고 애국자들을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친미파쇼분자였습니다.

최근 발굴된 일제의 ≪조선총독부급소속 관서직원록≫과 8.15광복직후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는 이홍규의 죄악에 찬 행적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930년부터 1940년까지의 ≪조선총독부급소속 관서직원록≫에 따르면 이홍규는 1925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뒤 조선총독부 검찰관서에 들어가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했습니다. 그후 1932년 서기겸 통역으로 승진함과 함께 당시 해주지방법원 통화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3년동안 근무했으며 1935년에는 8급으로 진급해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서기겸 통역원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을 일제의 검찰에 밀고하고 참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는 일제의 충견노릇을 잘한 것으로해서 1938년 7급으로 진급해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장흥지청검사국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1940년에 광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겨 일제의 사상담당검사밑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 2곳에만 현 공안검사에 준하는 사상담당검사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 지역이 조선독립투쟁열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에 사상담당검사를 두고 사람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불온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검거, 투옥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홍규가 사상담당검사밑에서 서기 겸 통역을 한 사실은 그가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에 충실히 복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홍규가 일제의 검찰기관에 투신한후 고속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가 체포와 같은 친일매국행위를 서슴지않고 감행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홍규가 마루야마로 창씨개명한 사실과 어린 이회창과 함께 일본옷을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친일행적을 입증해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홍규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마땅히 처단됐어야 했으나 이땅을 강점한 미군을 충실히 섬긴 이중주구였습니다. 미군정청 문서인 ≪임명사령≫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임명사령≫ 제54호는 1946년 1월 3일 작성된 문서인데 임명권자는 아놀드미육군소장이였습니다. 아놀드미육군소장은 당시 한국을 강점한 미군이 1945년 9월 11일 일제의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청으로 공식개편하면서 아베총독을 해임하고 임명한 최초의 미군정청 장관이였습니다.

아놀드는 1945년 12월 20일자로 이홍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로 임명하고 직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8.15광복후 이땅을 강점한 미군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각계 민중의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홍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기소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했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홍규는 미일의 이중주구로써 동족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매국역적인 것입니다.

독초뿌리에서 독초가 돋아나듯이 이회창 역시 판사의 길을 택하고 국민탄압에 앞장서온 살인마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입니다.

이홍규의 차남인 이회창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7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두차례의 대법관 등을 해먹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등 역대 독재정권의 국민탄압에 적극 협력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이회창의 행적중에서 몇가지 사례만 짚어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회창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인 1961년 한국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써 조용수사장에게 반국가단체동조협의라는 죄명을 씌워 사형선고를 내린 살인마입니다.

≪민족일보≫는 당시 남북협상과 교류를 주장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던 신문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32살의 젊은 애국적 청년의 목숨을 앗았고 ≪민족일보≫를 폐간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회창이 최근에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면서 언론자유를 사수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이후 박정희군사정권이 종말을 고할때까지 이회창이 서울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으로 승진하면서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선고한 죄악은 너무도 많아 다 열거할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박정권의 종말과 함께 이회창은 마땅히 처단됐어야 했지만 1979년 12.12특별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그의 살인마적 기질을 이용하기 위해 대법원판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이회창은 전두환의 신임에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약하고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참가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으며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판결 등을 내리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82년 3월 18일 문부식, 김현장, 김은숙, 이미옥씨 등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지르는 장거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5.18민중항쟁에 나섰던 광주시민들을 피바다에 잠굴 것을 지시한 살인원흉, 이땅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전횡과 횡포를 일삼아 온 미국에 대한 징벌로써 지극히 의로운 애국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1983년 3월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 대법원상고심 재판관이였던 이회창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문부식, 김현장씨에게는 사형을 김은숙, 이미옥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 범죄적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변호인들과 재판관들 사이에 감형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회창은 원심대로 판결할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상고는 기각되고 사형 등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5, 6공시기에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투쟁을 할때 홀로 고독하게 양심과 정의의 기준으로 재판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역사와 국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의 매국적 죄행은 주한미대사관과 정상적인 연계를 갖고 반민족적인 친미사대질을 자행하고 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한나라당의 정재문의원과 조웅규의원입니다.

정재문의원은 미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어지간한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회창은 이 채널을 통해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과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만킬로와트의 대북전력지원이 미국에 의해 보류된 것도 이회창의 역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휘변경을 논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면서 주한미군철수를 극력 반대할뿐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하고 한국을 그 시험장으로 내맡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회창이 얼마나 극악한 친미매국노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적화통일에 동조할수 있는 결과를 빚을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느니 뭐니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승공통일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승공통일론≫은 2000년 9월 5일 연세대학교에서 수행한 특강과 같은해 10월 30일 ≪코리아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자유, 인권,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통일을 추구한다≫고 떠들므로써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퍼주기≫로 매도하면서 ≪상호주의≫와 ≪검증≫, ≪투명성≫등을 운운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주적론≫을 펴면서 남북간의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시기상조니 뭐니하고 극력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회창은 철저한 반공분자, 반통일분자입니다. 이회창일족의 죄악에 찬 행적을 말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일가족속들이 저지른 만고대죄를 국민앞에 사죄할 대신 오히려 대통령감투를 쓰려고 광분하고 있으니 각계 민중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회창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정계에서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이회창은 대를 이어 저지른 역적죄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것입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이북을 악랄하게 걸고 든 것과 관련해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3일~14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회창은 지난 8월 악질적인 반공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안보강연회에 나타나 현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 **에 걸고드는 망동을 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과할수 없는 것은 그가 무엄하게도 이북에 대고 테러주의와 결연해야하고 그 첫걸음으로 KAL기, 아웅산 폭파 등 과거의 테러를 시인하고 진실로 사과하라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회창의 이러한 망발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공조하에 이북에 테러국의 모자를 씌움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날로 높아가는 이북의 위상을 허물어보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햇빛을 가려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와 같이 이회창이 들고나온 KAL기사건과 아웅산사건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북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보모략군들의 협약자 연극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정보모략군들의 협약자 연극으로 낙인된 KAL기사건과 아웅산사건을 들먹이면서 북을 또다시 걸고들었는데 그러나 이에 귀기울일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온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이북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로써 민중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회창따위가 제아무리 낡은 보따리를 들려쥐어 북을 중상하려고 책동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회창의 금번 망발은 또한 이북을 자극시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려는 반민족, 반통일적 망발이라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6.15공동선언발표후 오늘의 남북관계는 일련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따라 전례없이 좋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회창만이 이를 배아파하며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4.8합의서가 발표될때 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합의서 자체를 시비해 나선 자도 이회창이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됐을때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부분이 주한미군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고 비난해 나선 것도 이회창입니다.

그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될때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데 앞장선 것도, 평양에서 있은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인사들의 활동을 문제시해서 그들을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보를 지닌 이회창이기에 오늘날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또다시 북을 자극하는 망발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제아무리 날뛰어도 날로 좋게 발전하는 남북의 통일기운을 가라앉힐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회창이 계속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겨레의 염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분별없이 날뛴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회창의 금번 망발은 또한 이북에 테러국의 모자를 씌워 압살하려고 광분하는 부시행정부의 돌격대로 나서서 그들의 지지밑에 차기 대통령감투를 써보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비열한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이렇듯 터무니없는 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오래전에 민족의 명부에서 반민족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명한지 오래입니다. 이회창은 허황한 꿈에서 깨어나 친일친미사대매국행적의 진상을 국민앞에 까밝히고 정계에서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쪽이냐 잡덩굴이냐

재야언론인 이동수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2일~15일



일반적으로 대쪽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참대처럼 대가 바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을 뜻한다. 이를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한몸을 내댈수 있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는 단두대에도 서슴없이 나설수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그의 하수인들이 내돌리고 있는 것처럼 대쪽같은 사람이라 볼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회창은 어릴때부터 친일주구의 가정에서 자라 호위호식하면서 일신의 부귀영화와 출세만을 꿈꾸어온 사람이다. 대학교시절 그 꿈이 너무 허망해 동창들의 비난이 컸다.

더욱이 57년 6월부터 시작된 30여년간의 법관생활과정에 이회창의 매국배족적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침을 뱉었다. 그것은 이 기간 그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파쇼통치를 유지, 연장하는데 발벗고 나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애국민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광분했기 때문이다.

82년 3월에 있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 15명에게 극형과 중형을 언도한 것도 바로 당시 대법원판사로 있던 이회창이였다. 이회창은 오직 반민족반민주파쇼악법의 유지와 그 실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민족과 민중을 위한 대가 아니라 외세와 매국파쇼집단을 위해 이른바 대를 키운 것이다.

이회창의 반역적 정체는 6. 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전후해 더욱 뚜렷이 표현됐다. 애당초 그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대해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며 반대했다. 이런 이회창이기에 그는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 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제일 먼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조항조항을 꼬집어 시비, 반대했다.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접촉이 진행되자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넘어간다느니 북에 퍼만 준다느니 북에 끌려만 다닌다느니 하면서 그에 제동을 건 것도,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의 길을 가로막아 나선 것도 이회창이다.

어찌 그뿐이랴. 그는 주한미군철수와 양민학살진상규명, 일본의 역사왜곡책동반대 등의 구호밑에 벌이는 우리 민중의 반미반일투쟁을 한미한일관계에 손상을 준다며 극구 반대했다. 오죽하면 국민들속에서 이회창의 정치소속이 불투명하다는 비난까지 대거 쏟아져 나왔겠는가.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적 정체는 미국에서 부시정부가 출범하자 그에 아부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미국상전의 지지를 받아 차기 대권을 장악하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회창의 심복들은 그가 마치 청렴결백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돌리지만 이 역시 궤변이다. 이회창은 법관생활을 하던 때로부터 한나라당총재로 있는 지금까지 장구한 기간 각종 이권에 개입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 착복했고 근 1조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모았다. 세풍사건에 관여해 거액을 먹은 것도 96년 4. 11총선때에 ≪안기부자금횡령사건≫에 개입해 거액을 부정 착복한 것도 이회창이다.

법의 어두운 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전문가이기에 그는 거액을 먹어도 잘 드러나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먹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회창을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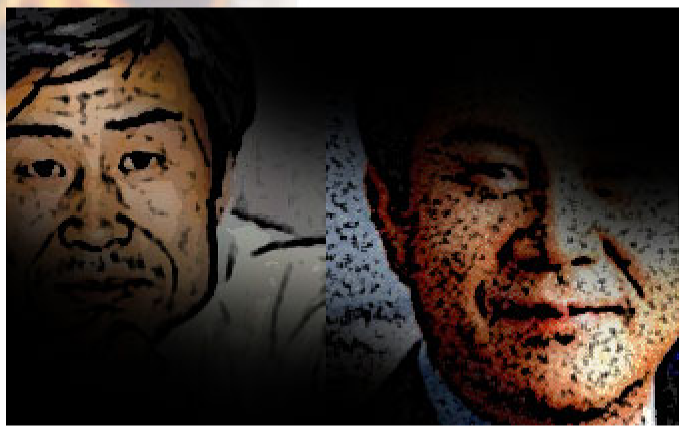
역사를 거스르고 민족을 반역하는 이회창이야말로 대쪽이 아니라 잡덩굴이다. 잡덩굴은 제때에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회창은 정계에서 퇴출시키자≫ 이 구호야말로 오늘 한국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구호이다.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네, 이회창에게 대쪽이란 건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거죠. 이회창은 대쪽이 아니라 벌써 뿌리채 뽑아 말리워버렸어야 할 독초와 같은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이회창같은 자가 아직도 정계에 있다는 건 우리 민중의 수치라고 할겁니다.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과 안기부의 밀실거래 진상을 규명하라

- 조갑제 기자와 정형근 전 안기부수사국장의 커넥션 의혹을 개탄하며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공안사건의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뒷거래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에 우리는 충격을 금치 못한다.

월간 말 12월호는 각종 자료와 증거를 통해 92년 ≪조선노동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조갑제 기자와 정형근 수사국장이 서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도 10월 28일자를 통해 92년 월간조선과 안기부의 밀실 거래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92년 9월 조갑제씨 등 월간조선 기자들은 시내 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과 만나 조선노동당 수사의 브리핑을 받고 이를 월간조선 10월호에 ≪특종≫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갑제씨는 10월 6일 안기부 공식수사발표문을 ≪손봐주는≫ 등 협조했을 뿐 아니라 안기부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우리는 조갑제씨가 과연 언론인인지, 공안기관의 협조자인지를 묻지않을 수 없다.

언론의 일차적 사명은 국민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 언론이 오히려 지난날 공안권력의 핵심이었던 안기부와 유착돼 정보와 보도를 거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월간조선은 안기부가 제공한 정보를 ≪쌍방취재≫ ≪확인취재≫라는 기본 절차조차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비상식적인 보도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도가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색깔공세에 악용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언련은 이번 월간조선과 안기부의 유착 여부를 밝히는 일은 언론의 정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언론을 악용한 구시대적 색깔시비를 근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조선일보사의 안보상업주의와 권언유착 행태를 지적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사는 이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일보사는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선일보사는 조갑제 기자를 해임함은 물론, 국민 앞에 공식사과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위의 요구를 또 다시 묵살한다면 우리는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펴 나갈 것이다.

1998년 12월 8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가정보원의 검은 장막을 당장 걷어라

- 옛 안기부(국가정보원) 예산 불법 유용 사건에 대한 논평 -

1. 검찰은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 때 217억 원, 1996년 4.11총선 때 940억 원 등 모두 1157억 원에 달하는 옛 안기부(국가정보원) 예산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각각 선거 자금으로 불법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유용된 1157억 원의 자금은 옛 안기부의 일반 예산, 재경원 예비비에 은닉한 옛 안기부 예산, 국가정보원 남산청사 매각 대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차례의 돈세탁을 거쳐 구 여권으로 몰래 빼돌려진 다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체계적으로 배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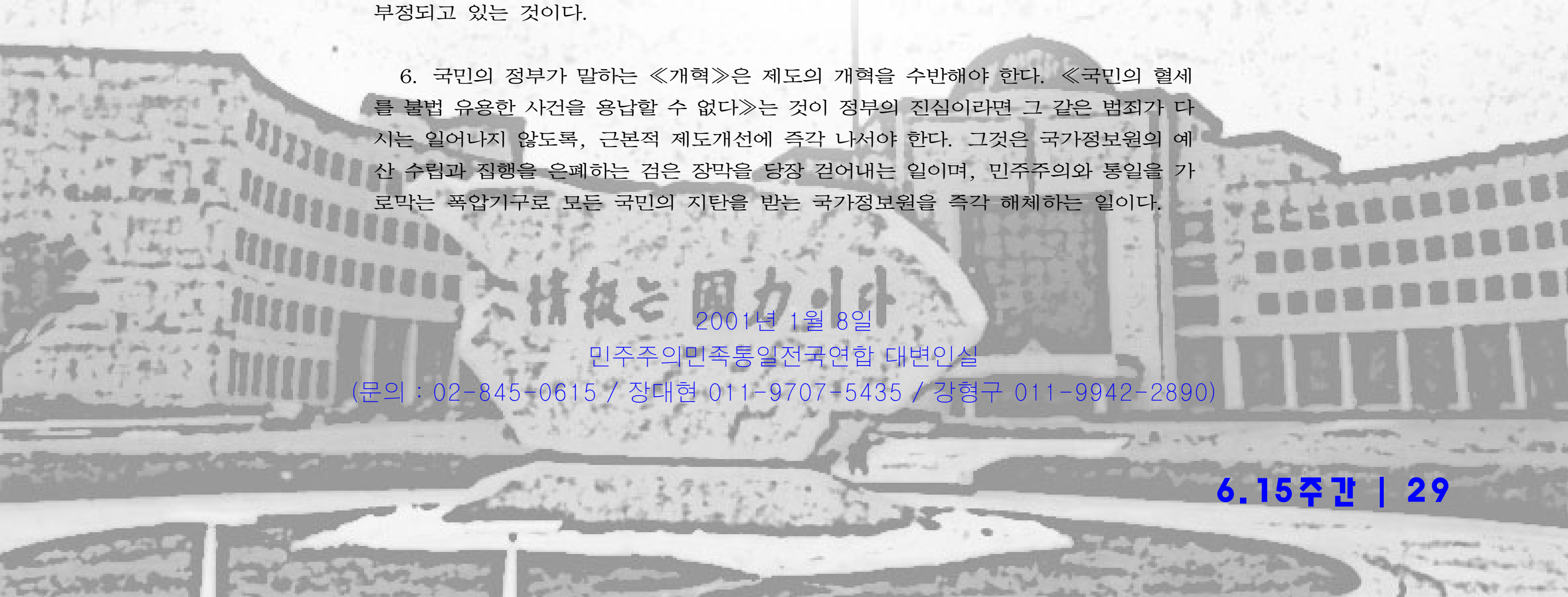
2. 이번 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가로채고, 그 추악한 돈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유린한, 가공할 범죄 사실들이 드러난 점에서 온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말끔히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며, 드러난 범죄자들을 죄에 따라 단죄해야 한다고 믿는다.

3. 그러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또 한번 참담하다. 검찰은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을 구속하고, 강삼재 당시 여당 사무총장을 곧 구속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쯤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태세다.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예산이, 그것도 천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감쪽같이 움직였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실무책임자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위에 따로 있을 터이다. 국가정보원에 은닉한 자금은 이른바 ≪통치자금≫, 즉 대통령의 검은 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게다가, 정당의 선거 책임자가 무엇보다 치열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자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 때의 대통령 김영삼 씨, 당시의 여당 선거대책위원장 이회창 씨 등에 대한 조사를 간단히 외면하고 있다.

4.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구 여권의 범죄자들뿐 아니라 용두사미식 수사로 그들을 비호하는 오늘의 검찰에게도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규탄을 보낸다.

5. 또한 우리는 옛 안기부(현 국정원)가 저지른 예산 유용 범죄가 오늘의 정권 하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한 해 예산은 모두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예산은 철저히 검은 장막에 가려져 있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지금도 정부 여러 부처 예산에 분산 은닉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감시할 장치는 오늘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6.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제도의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불법 유용한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진심이라면 그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은폐하는 검은 장막을 당장 걷어내는 일이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는 폭압기구로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가정보원을 즉각 해체하는 일이다.



2001년 1월 8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문의 : 02-845-0615 / 장대현 011-9707-5435 / 강형구 011-9942-2890)

KAL기 858기 사건 14주기에 즈음한 ≪진상 규명 촉구≫ 한총련 성명서

정부는 희대의 조작사기극,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전면 재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당시 대법관 이회창, 수사국장 정형근, 현지 조사담당 홍순영은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진실의 힘으로 전진하는 역사의 물줄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던가.

사상 최초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일대 획을 그은 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한꺼번에 갉아먹으며 정국을 반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KAL기 858기 폭파 사건. 사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시대를 넘어, 14년이 흐른 지금 ≪군사독재정권 재창출을 위해 완전히 조작 날조된 안기부(국정원)의 공작≫이라는 주장이 구체적 증거들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총련 백만학도는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KAL기 폭파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희대의 조작 날조극≫인 이 사건 관계자들을 남김없이 처벌하는 것만이 억울하게 희생된 원한들을 위로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채로 수사가 졸속으로 종결돼 유족들은 폭파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KAL기 실제 추락지점에서 사망자들의 유품과 비행기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안기부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 ≪**김정일** 친필지령≫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의 의혹은 1백가지도 넘는다. 특히 비행기 추락 원인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블랙박스≫ 수색작업을 단 열흘만에 종결짓고 구체적 증거도 없이 김현희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은 졸속행정과 사건 은폐 조작이 불러온 결과는 실로 막대하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이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이북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봉쇄를 정당화했으며, 사건발생 18일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재집권으로 4천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았다.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묻혀버린 KAL기 폭파사건은 남북관계가 진전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반공이데올로기 망령의 부활을 부추기며 보수우익세력들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KAL기 폭파 사죄없이 남북관계 발전 없다≫는 논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가로막았다.

반공반북이데올로기 확산과 분단고착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온 KAL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민족통일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반공이데올로기 확산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구천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시급히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라.

KAL기 폭파사건 조작 은폐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당시 대법관 이회창, 안기부 수사국장 정형근, 현지 조사 책임자 홍순영, 김현희 단독취재 특종으로 왜곡보도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민족앞에 사죄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현희 KAL기 폭파 조작은폐≫라는 ≪공통분모≫로 묶여 있는 이들은 아직도 버젓이 국가 주요 요직에 틀어앉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키기 위한 반통일적 행각을 서슴지 않으며 6·15 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 주범들이다. 특히 김현희 재판을 담당했던 이회창은 차기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고 있으니,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희대의 범죄자가 국가 최고통치기관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홍순영은 6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렬의 직접적 책임자이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 안기부의 온갖 범죄를 주도한 정형근 또한 국회의원 뺏지를 단 채 여전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나팔수가 되어 정국을 반공이데올로기 광풍으로 얼어붙게 한 장본인이다.

역사앞에 낱낱이 드러난 이들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어두고 간다면 억울한 원혼들의 한을 푸는 길도,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도 요원해질 뿐이다. 한총련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여전히 반통일행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이회창, 정형근, 홍순영, 조선일보에게 경고한다.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스스로 민족앞에 사죄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1월 3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이북의 ≪위협≫론 그 저의

성 훈 / 구국전선 제461호, 주체90(2001)년 12월 1일



미일반동들이 이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끈질기게 떠들어대고 있다. 그들은 이북에 의해 지역정세가 불안전해지고 있을 뿐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안보≫에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소동을 피우고 있다.

미국부시행정부는 이북이 ≪대포동≫미사일을 가지고서도 알라스카를 타격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장약을 더하면 미본토를 직접 들이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로부터의 방비책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계획보다 앞당겨 실전배비할데 관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비열하게도 이북의 ≪위협≫설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위 미사일기지들을 지도좌표에 찍어 공개하는가 하면 이북의 ≪대포동≫미사일이 자기의 동맹국들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최근에는 이북이 ≪핵폭탄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모략선전까지 내돌리고 있다.

일본 역시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국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공동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수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당면해서 미일반동들이 이북의 ≪군사적 위협≫을 떠드는 데는 그를 구실로 재한 및 재일 미군의 영구주둔을 정당화하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저들의 패권주의적 야망을 이뤄보려는 음흉한 저의가 깔려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국제여론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북의 ≪위협≫설을 퍼뜨리면 내외에서 미행정부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저들의 ≪미사일방어≫계획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일반동들의 뻔한 저의이다. 얼마전 개최된 미러정상회담에서도 부시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이 미국과 그 우방국 및 동맹국들을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라고 역설했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반동들은 미국에 편승하여 이북의 ≪위협≫설에 맞장구를 침으로써 달리기 시작한 군국주의팽창야망에 연막을 치려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수 있으며 때문에 일본은 부득불 군사대국화, 핵무장화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침략논리를 정당화하여 국제여론을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

이북의 ≪위협≫설을 퍼뜨리는 미일반동들의 총적목표는 그를 구실로 한반도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아시아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사활적 고리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를 아시아의 관문으로 보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지배층은 군사전략상 한반도를 거점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있어서 이북의 ≪위협≫설은 실효성있는 선전감이자 좋은 전쟁도발의 구실로 되는 것이다. 그들은 저들의 침략전쟁책동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이북의 ≪위협≫을 더욱 극성스럽게 국제여론화하면서 막후에서 침략전쟁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침략무력을 ≪한반도 유사시≫전선에 집중시켜 속전속결하는 전쟁전략이다.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함께 이북의 ≪위협≫설을 요란히 떠들어댐으로써 전쟁금지의 ≪평화헌법≫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전쟁마당에 합법적으로 뛰어들어 군국주의재침야망을 이뤄보려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일반동들은 가까운 앞날에 ≪일본주변사태≫시 ≪공동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제반 사실은 미일반동들이 떠드는 이북의≪위협≫이라는 모략선전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을 다는 공동군사작전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징조로 되고 있다. 미일반동들이 퍼뜨리는 이북의 ≪위협≫설의 저의를 예리하게 간파하여 반외세자주화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무엇을 보여주었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30일~11월 2일

지금 각계민중들은 힘들게 겨우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된 사실을 두고 관계당국자들에 대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일씨, 김현규씨 두분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들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우여곡절 끝에 열렸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 여야정객들은 물론 어중이떠중이들, 여기에 이번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가했던 홍순영이라는 사람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온당치 못한 발언을 일삼고 있어서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채 막을 내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허와 실, 흑백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오 일 :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회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6차 남북장관급회담처럼 빈손을 털고 나앉은 예는 아마 처음이라고 봐요. 그럼 좋게 발전하던 남북대화가 왜 이처럼 아무런 결실없이 끝나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고 했는데 그건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 우여곡절이란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해 지금 이 땅에 조성된 살벌한 정세라고 보는데요. 회담장소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던 남측은 6차 장관급회담이 열린 전야에 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전력을 대거 증강하고 북을 반대하는 각종 전쟁연습으로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어요. 그런데도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모든 적대행위에 대해 솔직히 시인해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는 데로 나갈 대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회담에 나가 변명과 **에만 급급했습니다.

김현규 :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번 6차 장관급회담에서 쟁점으로 된 건 비상경계조치문제였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남쪽의 살벌한 비상경계조치가 살아있는 한 대화나 교류, 인적 왕래도 원만히 이루어낼수 없기 때문에 조성된 현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매우 정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경계조치는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남북왕래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변명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비상경계조치가 내부문제라는 주장까지 들면서 회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일입니까. 9.11습격사건은 우리와 수만리나 떨어진 미국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살벌한 경계조치령까지 내리는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 새로운 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휴전선일원에서 북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을 벌이는가 하는 겁니다. 남북이 서로 마주앉아 대화를 하자고 해도 그렇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자고 해도 그 분위기나 환경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일 : 그렇죠. 하늘에는 전투기가 쉼없이 맴돌고 땅에는 대포와 미사일들이 숲을 이루고 바다에는 숱한 함정들이 떠돌며 화약내를 풍기는 이런 속에서 대화나 이산가족방문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건 세살 난 어린이도 알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남측 자신도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는 남측지역에서 대화도, 왕래도 할수 없다는 걸 시인했는데요. 그런데도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비상경계조치를 정당화해 나섰는데요. 바람벽을 문이라고 우겨도 분수가 있지 그런데 한때 외교관을 다년간 했다는 사람의 입에서 국제테러가 뭔지, 비상경계조치가 뭔지도 분간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인물이 없어도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회자 :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고사하고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홍순영이라는 사람의 무지의 표현은 동족을 주적으로 본다고 한 국방장관의 망발까지 비호한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살벌한 비상경계조치가 남북왕래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주적개념도 마찬가지죠. 홍순영은 주적이라는 개념때문에 남북사이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느니 또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신뢰구축이 없는 현 조건에서 주적개념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는데요. 애당초 이북을 동족으로가 아니라 소멸해야할 적으로 보는 것부터가 민족최대의 반역행위라 하겠죠. 우리는 누구와 통일을 해야 합니까. 이북동포들이 아닙니까. 손을 맞잡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방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을 반대하는 전쟁책동만 일삼는다면 나라의 통일문제는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습니다. 남북대화를 위한 탁자에 마주앉아도 북을 동족으로 보지 않고 적의를 품고 주적개념 불가피성을 운운하는 홍순영따위가 나섰으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자 : 홍순영의 망발은 사실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 나갈 것을 확약한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족행위이고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무지의 집중적 표현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엄중한 것은 홍순영이 6.15공동선언의 기본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마저 심히 모독, 왜곡해 나선 거라고 보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홍순영의 무지와 그가 가지고 있던 체질적인 사대매국근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요. 그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를 국제사회와의 ≪단절≫이니 ≪고립≫이니 하면서 왜곡해 나섰는가 하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대매국적인 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홍순영 그 사람이 이번 회담에 임하기 전에 온 겨레의 뜻이 담겨져 있고 내외에 확약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단 한 줄거리, 단 한 문장이라도 읽어보고 나갔는지 의심이 됩니다. 만약 그가 공동선언의 내용을 한 조항이라도 보았다면 그렇게는 선언을 모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 일 : 물론 홍순영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우리 말이나 그 개념을 몰라서 그 따위소리를 함부로 내뱉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라의 운명도, 민족적 **을 오직 외세에 의존해서만 풀어나가려는 사대매국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규 : 헌데 남측의 부당한 태도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문제토의에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측에서는 이산가족들이 고령이고 그들의 상봉을 지체시킬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11월중에 남측에서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방문단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이것을 시종일관 거부해 나섰는데 그러다가 북측의 강한 추궁에 못이겨 한 것이 이산가족상봉을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금강산에서 하기로 하고 교환날짜까지 합의하게 됐던 건데요. 헌데 남측수석대표 홍순영이 갑자기 이산가족들의 금강산상봉문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산가족방문단문제를 쓸데없이 제7차 장관급회담 시일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장소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방문단교환을 못하더라도 국회청문회에 나가 얻어맞는 일을 할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이같은 태도는 남측이 이산가족상봉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이해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 일 : 정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과정을 보면 ****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간난신고를 다하던 끝에 마침내 공동보도문초안이 완성되게 됐는데요. 그 골자를 보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산가족상봉을 금강산에서 한다는 것,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1월과 12월에 금강산에서 각각 진행한다는 것, 제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한다는 것들이였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공동으로 확인하고 발표만 하게 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어요. 전체회의를 몇분 앞두고 남북장관급회담 남측수석대표 홍순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남쪽에 돌아가면 누구의 ≪문책을 받을수 있다≫느니,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느니, ≪외교관만 하다나니 남북관계가 이처럼 어려운줄 몰랐다≫느니, ≪공동보도문을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가도 좋다≫느니 하면서 이미 합의된 사항들까지 모두 뒤집는 그런 경거망동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돼서 별수없이 장관급회담은 불필요한 문제마당으로 되고 아무런 결실없이 끝나지 않으면 안되게 됐던 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남북간에 많은 회담들이 있었지만 이번 장관급회담처럼 남측의 수석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막지한 망동을 부린 건 아마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회담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하는 겁니다.

오 일 : 한마디로 이번 회담의 전과정이 보여주었듯이 누가 실지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또 누가 그에 빗장을 지르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고 봅니다. 남북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근본핵이라고 할수 있어요. 헌데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의 입장과 자세를 보면 바로 이 근본핵을 집어던지고 선언의 기본정신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공동보도문의 최종합의를 고의적으로 뒤집고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나 더욱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하기로 된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을 파탄시킨 것은 그들이 6.15공동선언이행의 의지가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현규 : 물론 그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는 우리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그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남측의 체질화된 사대주의근성이 깔려 있다는 건 두말할 여지조차 없죠.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할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외세에 의존해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측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오각성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런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남측은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릇된 입장과 자세를 반드시 버려야 할겁니다. 남측은 어떤 변명도, 구실로 써도 이번 제6차 장관급회담이 결과없이 막을 내리고 그로 인해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 각계민중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남당국이 대세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때까지 가도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은 오늘과 같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건데요. 옳다고 하겠죠.

대조선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높이려는 ≪테로≫, ≪미싸일위협≫발언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은 직접 테로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싸일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 들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도수를 더욱 높이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동시에 미국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위협≫을 구실로 세계의 평화와 전략적안정을 파괴할수 있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속 추진하려는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를 걸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다그쳐 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자체방위를 위한 우리의 미싸일이 두려워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한다는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미국의 이러한 구실에 대하여 조소로 대하고 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미싸일계획은 평화적성격을 띠며 우리를 침략하려 하지 않는 나라에는 그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는 2003년까지 탄도미싸일발사를 동결할것이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확약하였으며 그것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들면서 우리의 ≪대량파괴무기개발이나 미싸일기술확산은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떠드는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도전이며 저들의 독단과 전횡에 대한 국제적반감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려는 비렬하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테로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원칙적립장을 밝혔으며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테로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근거도 없는 ≪테로≫와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우리를 계속 걸고 드는것은 미국이 말로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우리와의 대화에 대하여 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며 실지로는 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없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책동의 격화가 결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력사적교훈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살륙무기검증≫주장 비난

조선외무성대변인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문제들을 가지고 련속적으로 우리에게 생트집을 잡다 못해 우리를 계속 테로와 련결시키고 ≪대량살륙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압력을 가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세력이 겉으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다.

우리는 이에 대해 특별히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은 우리가 테로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테로를 반대하여 할바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테로지원국≫명단에 올려 놓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

우리에게 ≪테로≫ 모자를 씌운 미국이 우리와의 반테로협력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1994년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2003년까지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된 경수로건설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전력손실보상에 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받아 들일 대신 미국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더러 ≪사찰≫을 먼저 받으라는 강도적요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전망이 사실상 료원해 졌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수 없으며 부득불 해당한 대응책을 취해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조선통일국제련락위원회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규탄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가 19일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규탄하는 뷸레찐 317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세계의 안전과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자면 모든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반테로작전≫으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로 미국과 남조선군사당국이 남조선에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남조선전역에 대한 ≪비상경계조치≫를 선포함으로써 오늘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반 사태는 미국이 테로반대를 구실로 세계도처에서 자기의 힘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특히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정을 가로 막는 기본장애물로 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생동한 증거로 된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는 미국이 테로반대를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평화교란에 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뷸레찐은 ≪조미회담재개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부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쉬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부르짖다가 조미회담의제에 상용무력축감문제를 포함시키자고 들고 나온데 대하여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 현대화하고 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확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일방적인 상용무력축감을 강요하려는것은 그 누가 보아도 공정한 처사가 못되며 결국 이것은 대화상대방이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 강도적론리를 회담의제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회담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고의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은 테로반대의 명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많은 량의 생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여론을 퍼뜨리는 한편 북조선의 핵투명성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적인 사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요란히 떠들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부쉬행정부가 지난해에 있은 북남최고위급상봉으로 마련된 완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그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씌우려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조미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행정부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행동들을 중지하고 그 어떤 전제조건이 없는 조미회담에 응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뷸레찐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는 조선통일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5년부터 시작된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반도의 분렬을 가져 왔으며 조선인민에게 형언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며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

현 시대의 추세와 전체 조선인민의 자주통일열망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킬 그 어떤 명분도 없다.

그런데 최근 미국대통령은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항구적으로 유지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남조선, 일본의 3각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부쉬의 이러한 망발은 조선인민뿐아니라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통일의 기본장애물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과 3각군사동맹강화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떠벌이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의 방법으로 압살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차지하려는 자기의 변함 없는 야망을 보여 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랍치의혹≫ 소동을 벌리고 있는 일본당국을 규탄

(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얼마전 일본의 우익반동단체들이 도꾜에서 소위 ≪국민대집회≫라는것을 조직하고 이른바 ≪랍치의혹≫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또다시 악랄하게 벌린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29일에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일본에서 벌어 지고 있는 ≪랍치의혹≫소동은 우리에게 ≪테로국가, 테로지원국가≫, ≪인권이 유린된 나라≫라는 감투를 씌워 존엄 높은 공화국을 고립압살하자는데 그 본질이 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에게는 ≪랍치≫란 말 자체가 있을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인민들의 자주성과 인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공화국에 영주 및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이 베풀어 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은 지금까지 인도주의적견지에서 그 어느 나라에나 있을수 있는 ≪일반행불자≫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해줄데 대한 일본측의 요청을 받고 그 사업을 성의 있게 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말하는 ≪행불자≫는 없으며 오히려 지난 일제강점시기 랍치되여 끌려 간 가족들의 생사여부를 알려 달라는 우리 인민들의 요구가 수없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일본당국이 흑백을 전도하면서 조일회담이 결렬될 때마다 우익단체들을 내세워 ≪랍치의혹≫문제를 여론화하는 리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무분별한 행동은 자기 국민들속에 피해의식을 조장하여 조일회담을 파탄시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나아가서 과거범죄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회피하고 조선인민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원래 일본은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할 처지에도 있지 못하다. 력사적으로 일본은 랍치가해자이며 우리는 랍치피해자이다.

랍치에 대해 똑바로 계산하려면 1868년 일본의 ≪명치유신≫때로부터 지난 식민지군사강점통치시기 백주에 일본이 랍치, 련행한 600여만명의 조선청장년들과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 간 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의 행처부터 따져야 한다.

일본은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는것이 피해자인 우리의 법적권리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국가≫로 자처하기전에 자기가 20세기 전범국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21세기를 맞은 적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일본이 이번 ≪랍치의혹≫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이라는것을 공포발효시키고 침략의 상징인 일장기를 게양한 ≪자위대≫함선들을 공공연히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은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일본당국의 묵인조종하에 벌어 진 이번 사건을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과 세계의 정의와 량심을 우롱하려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한다.

력사와 정의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본이 일시 요행수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의 범죄를 얼마동안 은폐시킬수 있지만 인류의 공정한 심판은 결코 면치 못한다.

일본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총련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 치우라

조선 외무성대변인 강제수색 규탄성명

(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당국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총련중앙본부와 지방본부들을 강제수색하는 전례 없는 폭거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30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일본당국은 수백명의 경찰들을 동원하여 총련중앙본부와 지방본부들을 강제수색하는 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알려 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이른바 《검사기피》를 구실로 동포상공인들의 금융기관인 조선신용조합들에 대한 전례 없는 일대 검거수색소동을 벌려 왔다.

일본당국이 조은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총련중앙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강제수색한것은 다름 아닌 총련조직 그 자체를 과녁으로 정한 의도적인 정치모략이였다는것을 보여 준다.

조은문제로 말하면 그 무슨 비법거래나 《검사기피》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일본경제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하여 초래된 문제이다.

지금 일본의 많은 은행들과 《민단》계 은행들도 일본경제의 불경기로 파산되고 있다.

총련은 조은신용조합과의 거래에서 일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모든 활동이 어디까지나 일본법을 준수한 합법적인것이였다는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일본정부에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조은문제만을 특별히 극대화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 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아무런 명백한 법적근거도 없이 함부로 걸고 들면서 중앙본부까지 강제수색한것은 오만무례한 범죄행위이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비렬한 정치적탄압이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로 된다.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일제강제련행의 가장 큰 희생자들인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총련을 무분별하게 걸고 들며 탄압하는것은 이미 지은 죄우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 2중적인 범죄행위이다.

일본당국이 지금까지 총련을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정해놓고 주변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각종 구실을 붙여 탄압의 도수를 높여 왔다는것은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총련결성이래 처음 있은 로골적인 정치탄압사건이고 더우기 반테로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해외팽창야망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벌어 진것만큼 우리는 이를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수 없다.

총련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을 심히 모독하고 적대시하며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이러한 폭거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공화국책동을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일본당국은 총련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 치우고 그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한 사람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만일 일본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대적인 행동에로 나온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화와 핵대국화책동을 규탄

민주조선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1일부는 일본의 핵무장화와 핵대국화책동을 규탄하였다.

일본은 현재 37톤의 플루토니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에 가서 100톤의 플루토니움을, 나아가서 400톤의 플루토니움을 비축하려고 한다.

론평의 필자는 일본이 플루토니움의 대량비축이 《동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화적목적》의 활동이라고 구구히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들은 단순히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올해 3월에 핵운반수단이나 다름바 없는 개량형다계단운반로케트 《h-2a》를 시험발사하여 성공시켰다.

이제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각에든지 핵무기를 제조하여 지구상의 임의의 장소에 날려 보낼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위험한 핵위협국가이라는것이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무슨 《비핵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최한다, 그 누구의 《핵시험》을 규탄한다 하고 내간지러운줄 모르고 돌아 쳤다.

특히 《북조선의 핵활동의 투명성이 우려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었으며 그 무슨 《국제적제재》까지 운운하며 못되게 놀아 댔다.

그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핵위협국가》로 몰아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적우려와 경계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그 막뒤에서 핵장난을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비핵3원칙》이라는 다 꿰진 《보자기》로 핵으로 얼룩진 일본의 영상을 가리워 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아무리 《반핵》을 떠들며 《비핵국가》인체 하려 해도 그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을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일본은 핵대국화책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죄, 인류량심을 우롱하고 기만한 죄 등 모든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준엄한 국제적심판을 받을 날이 꼭 올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남조선군이 비무장지대에 곡사포를 끌어 들이는 군사적도발 감행

(평양 1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곡사포를 끌어 들이면서 이 일대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21일 14시 35분경 여러명의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18호 부근에 105미리곡사포를 끌어 들이고 우리측을 향하여 사격태세를 취하면서 전쟁광기를 부렸다.

미국에서 발생한 기습공격사건을 구실로 남조선전역에 《비상경계조치》가 취해 진 상태에서 공공연히 감행된 이와 같은 행위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남조선군부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책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북남관계를 군사적대결국면에로 끌고 가려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지난해 9월 26일 북남군사당국자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남조선군사당국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져 올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군사당국자들의 차후 움직임을 주시할것이다.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근처에 장갑차들을 끌어 들이는 군사적도발 감행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남조선군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또다시 중무기들을 끌어 들이면서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

26일 남조선군은 군사분계선 근처에 두대의 전투장갑차들을 끌어 들이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최근에 련이어 감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군사적도발행위들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남조선군사당국자들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이다.

바로 며칠전에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내의 중화기반입과 적대적인 행위를 금기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들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던 남조선군부가 또다시 대낮에 전투장갑차들을 군사분계선 대밑에 들이 민것은 그들의 호전성과 철면피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력사적인 북과 남사이의 6.15공동선언의 리행에 한사코 제동을 걸고 있는 남조선군부는 이러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 미싸일요격레이다를 배치하려고 하는 미국을 규탄

로동신문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1일부는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끈질기게 매여 달리면서 남조선에 미싸일요격레이다를 배치하려는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과 강경압살정책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 있는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엄중한 반평화적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미싸일요격레이다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것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게 미싸일타격을 가하기 위한것이다.

더우기 가소로운것은 우리를 겨냥하여 최근 방대한 전투무력을 전개하고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에게 《미싸일 및 상용무력축감》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알몸뚱이로 나앉게 하고 손 쉽게 집어 삼키려는 날강도의 론리이다.

우리는 미국의 로골적인 적대시압살책동에 고도로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미싸일개발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자위적대응조치의 하나이다.

우리는 그 어떤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를 건드리는 적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하는것이 우리의 혁명적기질이며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미제의 공중정탐행위 11월에 무려 160여차

북침공중전쟁연습도 계속 감행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11월에 들어 와 미제호전광들이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11월에 들어 와 고공전략정찰기 ≪u-2≫, 순찰기 ≪p-3≫, 지휘기 ≪e-3≫에 의한 정탐회수는 30여차나 된다.

또한 미제는 2일과 9일에는 6대, 6일과 16일, 20일에는 5대의 전술정찰기들을 각각 출동시켜 우리의 전연과 해안연선지역들에 대한 정탐에 광분하였다.

9일부터 20일까지의 사이에는 ≪eh-60≫전자전직승기가 동두천, 련천일대 상공을 매일 돌아치면서 군사분계선일대 우리측 지역에 대한 대상물 정찰에 날뛰였다.

27일 하루동안에만도 무려 10여대의 ≪rc-12≫, ≪rc-7b≫전술정찰기들과 ≪eh-60≫전자전직승기들이 우리의 최전연일대에 대한 정탐에 날뛴것을 비롯하여 11월에 들어 와 각종 사명의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에 의한 정탐회수는 무려 160여차나 된다.

한편 미제는 11월에 들어 와서도 공화국북반부를 노린 북침공중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에만도 외연도, 원주, 평창, 려주, 군산일대 상공에서 공중전투, 대지타격, 지상지원, 근접항공지원연습을 벌려놓았다.

≪kc-135≫공중급유기에 의한 공중급유까지 받으며 무려 500여대의 전투폭격기, 습격기들이 동원된 이 전쟁연습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감행된 위험한 불장난소동이였다.

이보다 앞서 미제는 5일과 6일 모두 400여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려주, 원주, 백아도, 포천일대상공에서 편대별집중타격과 긴급귀환 및 재출동훈련, 공중전투훈련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미국은 군사적위협을 조성하는 장본인

민주조선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미싸일요격레이다를 가까운 앞날에 남조선에 배비하기로 하였으며 저들이 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를 남조선이 구입할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섰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군사적위협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낸것이라고 ≪민주조선≫ 4일부가 락인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날로 로골화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증강책동은 변함 없는 반공화국군사적압살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히 올해에 들어 와 미국에서 새로 출현한 부쉬행정부는 반공화국압살을 저들의 대외정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밝혀 진 미국이 남조선에 새로운 무력증강을 획책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높이자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것이다.

남조선에 숱한 미싸일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전개해 놓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해 나서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보고 ≪미싸일 및 상용무력축감≫을 주장해 나서는것은 참으로 강도의 론리가 아닐수 없다.

론평은 미국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무력축감≫주장도 내세울수 없다고 하면서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미국이 세계면전에서 수치스러운 과거력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당장 중지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주재 일본대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1. 미국 주재 일본대사인 가토 료조가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 이라크가 유엔의 사찰을 수용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한 용서하지 못할 저질발언이다.

2.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 속담이 있다. 과거 저지른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이 무고한 민간인의 피를 보며 미쳐 날뛰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와는 아무런 연관도 증거도 없는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사찰을 요구한다는 것은 전범국가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저속한 행위이다.

3.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약소국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민간인을 대량학살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평화를 말살하는 틀림없는 공범이다. 일본이 진정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과거 범죄를 진실되게 사죄하고 미국이 저지르는 전쟁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만행을 저지하는데 힘 써야 한다.

4. 전범국가인 일본이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내모는 한, 일본은 다른 나라의 군사적 자주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미국이 저지르는 전쟁행위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재무장을 저지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고 전개할 것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2001년 11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홍순영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난 11월 진행된 6차 장관급 회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몇가지 내용을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에 바쁘시겠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1. 각종 신문 보도를 종합해 보면 6차 장관급 회담에서 ≪12월 10일을 전후하여 4차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2차 당국자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각각 11월, 12월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7차 장관급 회담을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 공동보도문 초안을 완성했다가 귀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아래 첨부된 신문기사 참조).

1) 먼저 위의 사실이 정확한 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반대하였다면 이것이 수석 대표로서의 개인적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 당국의 협의 아래 진행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보도문 처리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1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에 근거하여 사실이 정확하다는 전제 아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이었고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비추어 이산가족 상봉과 여타 현안이 타결된 조건에서 6차 장관급 회담 전체를 무산시킨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이와 관련하여 8.15 통일대축전 이후 정부 당국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데 이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2) 귀하는 장관급 회담의 결렬 배경과 관련하여 ≪대북식량지원이 이산가족 문제와 사실상 연계될 수밖에 없다≪(한겨레 신문, 강태호 기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이른바 ≪상호주의≫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3) 11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화평화통일포럼 주최로 열린 정책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관련하여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2, 국민적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3. 국제사회의 기대와 협력을 확보하면서≪(통일뉴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6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경제교류를 강조≪(한겨레신문, 이제훈 기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는 견해는 대화의 상대방인 북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3. 귀하는 11월 28일의 정책 포럼 기조 강연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회담을 적극 추진하여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통일뉴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1) 6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은 비상경계령 해제, 전력 증강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향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2) 향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민간급 교류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는 지난 5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3) 8.15 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참가자들이 구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남북대화 진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사법 당국에게 평양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 12월 4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아프간 다음은 북한? 확전을 반대한다!≫

시민사회단체,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의결 반대집회 개최



아프간 전쟁이 이라크와 북한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정당화하는 한국군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규탄연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론이 확전론과 연결돼≫있어 ≪한국군 파병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확전 논리가 강행될 경우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이슬람에 대한 문명충돌이 아님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이고 ≪이슬람 국가가 아니면서 깡패국가로 지명된 북한을 이 확전 논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한반도가 ≪전쟁 논리≫에 말려 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NGO와도 국제 연대를 강화해 투쟁해야 한다고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도 확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하면서 최근 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15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한 것이 알려졌다며 나머지 350명의 임무는 미확인 된 상태라며 350명이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일 사무처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국군 파병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류은숙(인권사랑방) 사무국장은 국정원의 ≪테러 방지법≫ 입안과 관련해 상황보고를 했다.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우리 모두는 대테러 용의자이다≫며 ≪무슨일이 있어도 이를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프간 파병 반대하고 우리 자식들을 우리 힘으로 보호하자≫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한동안 대치상태에 있다가 홍근수(자통협) 상임대표의 규탄연설을 끝으로 자진 해산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어서 국회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한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평화를 만드는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국회 앞에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1-12-01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최근 미제침략군이 6.25전쟁시기 한반도 이남땅에서도 생물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51년 9, 10월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이 광주시 무등산일대에 백색구름 또는 안개같은 분말액을 여러 차례 대량 살포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쓰러지고 300, 400명이 피부가 검게 변색되면서 모두 사망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8월 국제진상조사단 성원들이 생존자들의 증언과 현장방문을 통해 미제침략군이 살포한 그 분말액이 바로 출혈열 독소인 ≪T-2≫ 진균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백색가루 ≪T-2≫ 진균독은 100% 살상률을 가진 가공할 생물중무기이다.

새로 드러난 미제흡혈귀들의 만행은 지난 6.25전쟁시기 한반도 전지역에서 감행한 무수한 세균전만행들 중에 한 사례에 불과하다.

미국이 국제법상으로도 금지된 생화학무기사용을 계획하고 1951년 미합동참모본부장을 통해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맥튜 디치웨이에게 한반도에서의 세균전실시에 관한 비밀명령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미공군제5사단의 지휘하에 미해군제1항공대가 이 비밀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리하여 한반도 남북전지역에 콜레라, 천연두, **병, *** 등 유행성출혈열 등을 일으키는 20여종의 각종 세균탄이 대대적으로 투하되었으며 수백만의 무고한 우리 민중이 병마에 시달리고 생명을 잃었다.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민중 멸살을 겨냥해 사용이 금지된 생화학무기까지 동원해 우리 민족을 야수적으로 살해한 미제살인마들은 전시도 아닌 70년대에도 휴전선의 철책선지역에 고엽제까지 살포해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온갖 야수적인 살인행위들에 대해 오늘까지도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에 드러난 무등산일대에서의 생물무기 사용범죄에 대해서도 아닌 보살하고 있다.

우리 한민전은 미국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미국의 세균무기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겨레들을 또한번 살육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로, 미국이 저지른 만고대죄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앞에 사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낙인찍고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세계가 공인한 바와 같이 전 인류를 멸살시키고도 남을 생화학무기를 쌓아놓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19세기 인디안멸살로부터 오늘의 아프간전쟁에 이르기까지 침략전쟁마다에서 생화학무기로 무고한 민중을 학살한 살인귀들도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백색가루 ≪탄저균≫도 바로 미국방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제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인류를 생화학무기로 마구 학살하는 살인악마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생화학무기생산사용의 진범인 미국이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이북과 같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나라라는 감투를 씌우며 걸고드는 것은 파렴치성의 극치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범죄적인 생화학무기생산사용의 진범인의 정체를 가리우며 나아가서 9.11대미습격사건에 북을 연결시켜 아프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겨 놓자는데 그 검은 속셈이 있음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도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분노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징벌을 면할수 없다. 미국은 6.25전쟁시기와 전후에 생화학무기로 우리 민중을 무참히 죽인 모든 범죄행위들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제에 의해 겨레와 민중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기 위해 반미자주화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미제살인귀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을 기필코 결산할 것이며 더욱 거세찬 반미항전의 불길로 미제침략군을 이땅에서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주체90 (2001)년 11월 30일
서울

북, 금강산 새해 남북행사 실무접촉 제의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최근 남한 민간단체에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 위해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잇따라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따르면 북측 민화협은 지난달 22일과 26일 남측 ≪6. 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에 이같은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는 것. 전국연합 관계자는 ≪이는 통일연대가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답신을 보내온 것≫이라며 ≪올해 통일연대와 남측 민화협, 종단 등이 함께참여했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도 포함시켜 새해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대 관계자는 ≪북측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통해 통일연대로 팩스를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준비위원회를 만든 뒤 300여명 규모로 대표단을 보내자는 데 대해 통일연대, 남측 민화협, 종단 실무자간에 공감을 이룬 상태≫라며 ≪하지만 정부 반응 등을 살펴본 뒤 내부 조율을 좀 더 거친 다음 종단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도 ≪당국간 남북 접촉이 끊긴 상태에서 민간 단체가 접촉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8. 15 평양 공동행사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고민중≫이라며 ≪내주중 상임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단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또다시 통일연대와 함께 북한에 가는 것은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통일연대가 가든 말든 우리로선 가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 15 공동 행사 파문이 일어난 뒤인 지난 9월 종전처럼 국가보안 위반 혐의로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람뿐 아니라 민・형사 문제로 수배중이거나 이적단체 구성원도 모두 방북을 불허하기로 내부 기준을 정한 바 있어 이번 행사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2001/12/1
(서울/연합뉴스)

새해 남북행사 실무접촉 제의키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 단체대표들은 5일 서울 여의도 민화협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제안해온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 ≪오는 17-18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오는 10일 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화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 통일연대간에 오간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고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명의로 북측에 새로 제안을 할 계획≫이라며 ≪민화협이나 종단은 일단 이번 행사를 실무적으로는 추진하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단 관계자는 또 ≪준비위원회는 어차피 남측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을 중심으로 구성되겠지만 단체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범민련나 통일연대라는 단체 이름으로 가입할 경우 생기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자는것과 함께 시민단체 인사들의 참여를 원활하게 하자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 종단으로서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번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화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종단 등의 핵심 실무자 1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12/5
(서울/연합뉴스)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무엇을 보여주었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일~2일

지난 11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강요된 것으로 하여 여론이 분분한데요. 그럼 이번에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진행됐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기지반환과 새로운 토지제공을 골자로 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주한미군비용분담금문제들이 중점 논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김현규 : 지난 11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일부 주한미군기지들의 반환과 주한미군주둔비용 등 여러 현안들이 합의됐는데요. 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4천만평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환하는 대신 미군이 요구하는 새로운 토지 75만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한국측이 부담할 방위비는 올해보다 10.4% 늘어난 4억9,000만달러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도에도 이를 기준해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한미군 당국자들의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미국의 강도적 요구와 한국의 굴욕적 수락으로 이루어진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속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하는 거예요.

김현규 : 우선 이번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미국의 오만성과 침략성, 약탈성을 더욱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됐다는 주한미군기지반환문제를 놓고도 그걸 알수 있는데요. 주한미군은 2011년까지 저들이 사용하는 4천여만평의 땅을 한국에 되돌려준다고 하지만 이미 그 땅들은 미군이 지난 수십여년동안 황폐화시킬대로 황폐화시킨 불모의 땅들이고 또 미국이 새로 요구하는 의정부캠프 스텐리부근, 오산비행장주변 그리고 평택지역, 포항지역 등의 75만평 토지들은 기존의 땅과는 대비할수 없는 노란자위들입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미국기지반환에서 지금까지 쟁점으로 되어온 용산기지와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사격장 그리고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등은 이번 반환협상에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미국은 미군기지반환이라는 간판밑에 이땅에 대한 침략과 약탈, 식민지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래요. 헌데 그건 미군기지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문제에서도 미국은 저들의 흉포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당초 한국측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4억5,700만달러로 확정했지만 미국은 그보다 2,300만달러를 더 낼 걸 강요했고 결국 강제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은 또 저들의 호전성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네, 옳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민중은 미국의 호전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미국이 불필요하거나 다 파먹고 빈껍데기나 같은 기지의 토지들은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미군기지들은 계속 장악하거나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같은 기지들에 최첨단전쟁장비들을 집중 배치해 북침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때문에 평택이나 군산의 미공군기지를 비롯한 중요 미군기지들은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이 실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회자 :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라 아니할수 없군요. 오늘의 이번 화제를 통해서 우리 민중은 한국측의 굴욕성과 비굴성을 또한번 통감했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에서도 특히 한국측은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확정했고 분담금중에서 원화의 지급률을 90%선으로 크게 올려 **분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광고하지만 한국경제의 상황이라든가 국방예산증가율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놓고 볼때 분담금을 올해보다 10.4%나 인상된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할 용산미군기지나 매향리, 스토리사격장을 논의대상에 상정시키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서울의 한복판에 틀고 앉은 큰 규모의 용산미군기지는 몸채에 박힌 비수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강압한다고해서 굴복한 것은 정말 분격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자들이 무슨 성과나 거둔 것처럼 큰소리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수 없죠. 미국측이 의제의 대상으로 될수 없는 《에프15케이》전투기 수입을 강요한 것은 미국의 오만무례함과 동시에 한국측의 비굴한 협상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미국의 침략성과 약탈성, 호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반면에 한국측의 사대매국성과 비굴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치욕스러운 마당이였는데요. 우리 민중은 예속과 굴종으로 얼룩지어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정된 어떤 결정도 배격해 나서야 할겁니다. 각계민중은 미군에게 빼앗긴 땅을 전부 되찾고 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과 **집단의 사대매국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근본은 ≪미군기지를 반환 받는 것≫

소파개정국민행동,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촉구 1인 시위 열어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5차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국민행동)은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28일부터 이틀간 국민행동 회원 1인이 2시간씩 교대하며 참여한 1인 시위가 하루종일 진행됐다.

29일 오전 1인 시위자로 나온 장도정(30,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씨는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는 (미국이) 2002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10.4%를 인상할 것과 공여지 4천 44만 5천 평을 반환하는 대신 의정부, 평택, 포항 등 금싸라기 땅을 새로운 공여지로 요구≫했으며 또 양국이 아프간 전쟁의 한국군 500명 파병에 합의했다고 분개했다.

장도정씨는 ≪국민혈세로 엄청난 액수를 미군에게 바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끌려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장도정씨는 ≪이번 사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결성으로 미군기지 반환 투쟁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며 이 투쟁이 확대되면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8일부터 열린 5차 실무회의에서는 한미연례안보협의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기초해 원화지급비용, 분담금의 분야별 집행방식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9

민중의 적 이회창은 자폭하라

지식인 김영수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30일~12월 2일

지금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이회창과 그 패당에 대한 분격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민중의 적 이회창은 자폭하라≫ 지식인 김영수씨의 글을 읽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이라고 하면 때려부숴야 할 대상을 말한다. 그러면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어떻게 되어 민중의 적, 때려부숴야 할 적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회창이 민중을 해치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중의 사활적 요구를 외면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게 각방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민중의 요구는 자주, 민주, 통일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훼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미국을 해방자, 우방으로 떠받들면서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자행하는 치떨리는 온갖 만행을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그에 항의하는 민중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비난하며 방해하고 있다.

이회창은 미군의 양민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미군기지 반환 등 반미투쟁과 일본의 역사왜곡반대 등 반일투쟁을 한미한일관계에 손상을 준다고 반대하면서 우리 민중의 자주화투쟁에 훼방을 놓고 있다.

이회창은 우리 민중의 자주화투쟁뿐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투쟁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있다. 원래 이회창은 30여년간 법관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식민지파쇼독재체제의 유지, 강화에 헌신한 특등공신이다. 이회창은 61년 한국역사상 최대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써 반민주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사장을 이른바 반국가단체 동조혐의로 사형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82년에 있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 15명에게 극형과 중형을 언도한 것도 당시 대법원판사로 있던 이회창이다. 그는 이러한 죄많은 과거행적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5, 6공시기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지금도 떳떳하게 여긴다고 말해 사람들을 분격케하고 있다.

그는 극악한 반통일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앞장서 반대하는가 하면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와 시위권을 유린하는 집회법의 유지를 주장하고 심지어 민주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마저 반대하며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공공연히 촉구하고 있다.

이회창은 특히 국민들의 사상선택의 자유마저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것을 출판보급하는 진보적 출판언론인들을 친북사회주의자라는 모자를 함부로 씌우며 탄압할 것을 공안당국에 촉구하고 있어 언론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이회창은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운동의 방해자일뿐 아니라 통일운동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민족의 원수이다. 그의 반통일분열주의자로써의 흉악한 정체는 6. 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회창은 지난해 6월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자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면서 상봉장면이 TV에 방영되자 TV를 끄고 돌아앉아 손자와 화투놀이를 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는 6. 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공동선언에 상호주의가 철저히 배제됐다느니 자주적 통일주장은 미군철수주장으로 이어질수 있다느니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은 위험한 방식일뿐 아니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느니하며 시비반대했다.

그는 특히 6. 15공동선언의 이행을 한사코 반대하며 그에 제동을 걸고 있다. 6. 15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면 우선 외세, 특히 미국의 한국강점과 내정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이나 반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망발하며 동족간의 공조보다 외세인 미국과의 공조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해 이북에 퍼만준다느니, 상호주의원칙을 지켜야 한다느니,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느니 하며 훼방하고 있다. 심지어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진행하는 경의선철도복원공사마저 남침통로를 열어준다며 반대했고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대북투자에 대해서도 국민혈세만 탕진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회창은 개인생활에서도 너절하기 그지없다. 어릴때부터 부귀영화와 출세를 꿈꾸어온 그는 30여년간 법관생활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수많이 개입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착복했고 15대 대선때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강요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정치자금, 선거자금을 끌어모아 뿌렸고 내년에 있을 16대 대선에서 후보로 출마해 이른바 압승하기 위해 벌써부터 선거자금마련에 고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다 자행하고 있다. 이회창이야말로 민중의 적, 자주, 민주, 통일의 암적 존재이다.

지금 경향 각지의 각계민중이 반이회창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의 정계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회창은 민중의 거센 항의와 규탄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하기 보다 차라리 자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국민과 민족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네, 이회창과 같은 역적과 한지붕밑에서 산다는 건 우리 민중의 수치라고 하겠죠. 암은 전이되기 전에 초기에 도려내야 하고 역적은 그 패당이 더 커지기 전에 매장해 버려야 하는 거겠죠.

마침내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된다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2일 창립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힘찬 행진이 마침내 시작됐다.

12월 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 기념관≫ 대강당에서 독립운동가 (석근영, 김봉현, 황갑주, 박문, 모희옥, 최오균, 고광돈, 이대성, 윤규성, 윤석진, 오용수) 일반시민, 학계, 정계, 사회운동가 등 350여 명이 대강당을 꽉 채운 상태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을 창립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 숙명여대 역사학과 교수)를 공식 출범시켰다.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측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모금액은 3억316만9166원(납입:1억7861만4166원/약정:1억2455만5000원/협찬,기증:2700만원)이며, 발기인으로는 개인 1560명 단체 138개 후원회원은 개인 119명, 단체 1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는 윤경로(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수석부위원장/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석근영(광복군 동지회)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강희남 목사의 축사와 박현서(사학자) 교수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김희선(민주당) 의원은 ≪금기시 되어온 친일파 문제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날이며 뜻과 지혜를 모아 식민지지배와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자≫라고 역설하였다.

한상범(민족문제연구소 소장/동국대 법학과 교수) 재단 부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은 1989년 친일연구로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를 개소하고 1995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하였다. 1999년에는 국내외 교수 1만1천 명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지지선언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000년 반민특위 본부자리(명동 국민은행 구 본점) 기념 표석을 제막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재단 설립 기획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반성과 화해를 위한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 발기인 대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7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일제침략역사왜곡전≫의 개막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재단 창립 분위기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둔 결과 오늘에 이루었다고 그 동안의 재단 설립 과정의 힘든 여정을 밝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재단 정관이 통과되었다.

정관의 주요 부분을 살펴 보면, ≪≪목적≫으로 민족사 정립을 위한 각종의 연구활동, 역사문화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역사정의의 실현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지원하여 1,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 2, 강제동원 등 민족수난사에 대한 남북 해외 공동 조사사업. 3, 근현대사 자료의 발굴 수집과 정보화 사업. 4, 민족공동체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시민단체 교류 사업. 6,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한 출판 교육 사업. 7, 기타 재단 설립 목적을 위한 부대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기했다.

재단의 임원진으로는 이사장에 조문기(74. 독립운동가) 부이사장에 한상범(65.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만열(63.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이사 12명은 김원웅(57. 국회의원), 김용삼(51. 사업), 박영철(42. 치과원장), 이관복(67. 시민운동가), 이창복(63. 국회의원), 이해학(56. 목사), 임은숙(39. 회사원), 임헌영(60. 중앙대 교수), 장의균(51. 기업인), 정명수(35. 세종정보 대표), 조동기(36. 학원장), 조세열(44. 서일대 교수) 씨가 선임 되었으며 감사로는 전기호(63. 경희대 경제통산학부 교수), 류현선(51. 민족문제연구소 감사) 씨가 선임되었다.

취임사를 통해 재단 조문기 이사장은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는 것으로 친일파 청산의 마무리는 아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나이가 많아 막중한 소임을 다할지 모르겠지만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통해 편찬 사업에 임하겠다. 재단에 힘을 실어줘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친일파 청산에 다 같이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임헌영 이사는 재단의 2002년 ≪주력사업≫으로는 2002년 3월 제 2차 국민공청회 개최, 8월 ≪일제통치기구/친일단체 편람집≫ 발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부 구성 완료, 사전수록대상 1차 선정, 집필 의뢰, 연구발표회 및 연구지 간행 순회강좌를 기획 진행하겠으며, ≪연구사업≫으로는 2002년 1월부터 해외(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과거 청산 사례 연구 착수하며 3월부터 일제시대 관료사전 발간 추진, 8월에는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 2차분 완간 및 만주지역 한인 생활상 조사 연구 결과 1차 발표를 할 것이며, ≪연대사업≫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진행,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욕에 찬 사업계획을 펼쳤다.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김원웅 의원은 내년 예산에 사전편찬을 위한 국고가 지원되도록 예결위소속 50명의 의원에게 동참을 호소하겠다고 하여 참석한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만열 편찬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이 탄생하는 날, 단절된 우리의 민족사는 새로 이어질 것이며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할 줄 아는 위대한 한국인의 용기에 세계는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일부 학자나 단체의 힘으로 부족하다.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이 친일인명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범국민적이고 초정파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이 사업에 반성과 화해를 위해서라면 친일인사의 후손일지라도 기꺼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명수 이사는 대정부 촉구문에서 오욕의 역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전 편찬을 위한 국민모금 허용과 재정적, 제도적 지원의 결행을 요구하면서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일체의 기념사업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만세 삼창으로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까지 무려 세 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의 재단 창립대회의 열기는 제1차 공청회로 바로 이어졌다.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친일파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 것인가와 사전에 기록될 친일파 선정 대상의 한계였다.

이날 진행된 창립대회와 공청회는 참석자들의 열기로 인해 무려 6시간을 넘게 진행됐다. 이와 같은 열정이 재단을 통해 모인다면 ≪친일인명사전≫은 몇 년 후 우리 손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시민 김석규(43, 회사원) 씨의 다짐과 같이 하루 빨리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기를 바란다.

황평우/노순택 기자 wearea@chollian.net

내년 1월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혐의 기소예정

조선일보에 대한 반민족, 반통일적인 왜곡보도에 대한 반대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던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말 민간법정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통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민간법정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행위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안에 따르면 ≪조선일보를 반민족, 반통일 수구세력의 대변지≫라고 규정하고, 이는 8.15민족통일대축전기간의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는 보도에서 조선일보의 본질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적 행위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틈만 나면 스스로 민족정론지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대동아공영론을 주장,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했고, 광주학생 사건 등 민족항쟁을 테러로 매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재권력에 대한 낯뜨거운 아부를 통해 독재권력 시절 급성장하여 이제 1등 신문을 자임하며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대참사 이후에는 근거없는 기사로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루어야 하는 민족적 염원을 또다시 대립과 대결로 몰아 가려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고 이 행사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행위에 대해 단죄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가장)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구성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 범국민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간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행사인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법정의 진행은 1차로 각계각층의 1,000여명의 발의로 조선일보에 대한 반민족, 반통일행위 처벌에 관한 법안마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위원내에 고발센타를 설치 고발을 접수, 민간법정 검사단에 고발하면, 검사단에서 조선일보를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해 기소하고, 법정심리를 진행 배심원의 심리판정 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지민 2001-11-29
민족민주인터넷방송

≪국가보안법≫ 왜 철폐해야 하나

조연택 / 구국전선 제461호, 주체90(2001)년 12월 1일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되였다. 자주통일에로의 민족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시대의 이 요구를 관철해 나가자면 그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을 ≪이적분자≫로 몰아 탄압, 처형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반민족, 반통일악법이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고 민족의 통일염원에 맞게 남북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전의 대결시대의 유물이다. ≪국보법≫은 이북으로 쏠리는 민심을 차단하고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총칼로 말살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이북을 모해 압살하려는 범죄적 야망밑에 이전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에 둘도 없는 파쇼악법이다.

시대는 변했다. 남과 북사이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 나가려는 겨레의 의지와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되고 있다.

≪국보법≫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악법에 의해 지금도 이북을 동경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려 철창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

지난 8월 이북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했던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7명을 비롯한 16명의 인사가 체포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국보법≫에 의해 6백여명의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구속되었거나 수배당하고 있으며 1백 20여명의 양심수들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의 피해자로 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게 되고 남북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속에 ≪국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국보법≫을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각계층 민중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국보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시대의 오물인 ≪국보법≫철폐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한통련 해외동포,
≪그리운 고국 땅 자유로이 왕래해야≫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 귀국이 불허된 동포들에 대해 자유로운 귀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자료관≫ 등이 공동 주최로 29일 오후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에서 열린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임병택(일본 홋가이도 삿포로시, 시정연구소) 사무국장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김대중씨는 1971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결성을 위해 일본에 왔으며 이를 눈치챈 고국의 정부에게 73년 납치를 당했다≫며 ≪한민통 초대 의장으로 내정된 김대중씨를 구출하기 위해 일본 동포들은 온갖 박해를 받아 가며 결국 그를 구해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1998년, 그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일본 동포들의 분위기에 대해 임병택 사무국장은 ≪고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는 기대에 크게 부풀었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결국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 분개했다.

또한 임병택 사무국장은 ≪지난해 광주항쟁 20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국에 신청했으나 과거에 반정부운동을 했기 때문에 반성문을 써야 한국 정부의 입국이 허락된다는 답변을 받아 분노했다≫고 전하고 ≪조국에 영광을 드리려고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오명을 쓸 수는 없었고 함께 고통을 겪었던 동지들이 생각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병택 사무국장은 1960년대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이후 한민통으로 바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한청(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이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동포들에게는 남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한민통은 89년에 한통련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한통련은 지금까지 ≪이적단체≫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도 이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입국을 엄격히 규제 당하고 있다.

임병택 사무국장은 ≪해외에서 본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동포들에게 최소한 고국을 출입할 수 있는 자유와 과거의 활동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 국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토론자로 나온 나가키따(오사카 거주) 변호사는 73년 김대중씨 납치에 대한 한민통의 헌신적인 자세는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군사독재 정부를 지지하고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김민웅(뉴욕 길벗교회) 목사는 ≪미국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이란 제하의 발표문에서 ≪미국에서는 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미국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반미운동이 시작됐고 분단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일이 한국 민주주의 문제 해결에 보다 중심이 되는 현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목사는 이러한 인식은 ≪미국내 민주화 운동이 친북세력으로 몰려 한국 민주화 운동에 제약이 되고 이는 대중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부딪쳐 주류에서 배제되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는 ≪민간정부의 출현으로 미국내 민주화투쟁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때 분단상황의 미해결로 인해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온 윤한봉(민족미래연구소) 소장은 ≪미국내 일부 동포 세력은 친미반공주의가 한국보다 더 심하다≫며 ≪이는 이민 당시 의식에서 고착된 것이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과 현지(남한)의 변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이종수(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원장은 ≪유럽내 민주화 운동은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조국통일운동으로의 확대는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 1990년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종수 원장은 ≪그러나 유럽내에서의 통일운동은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남북을 바라보는 편견이 적으며 남북을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통련 곽동의 의장이 ≪조국 동포들에게 보내는 글≫을 보내 ≪한통련에 씌워진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을 벗기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며 모국왕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결성식을 가진 ≪한통련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는 선언문에서 정부의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취소하고, 한통련 회원들의 자유로운 고국왕래를 보장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29

≪국가보안법, 53년의 부끄러운 역사 끝내야≫

시민사회단체, 인권주간 선포 국회 앞 기자회견 가져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 53주년이 되는 12월 1일부터 10일간을 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통일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상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국보법을 적용해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김대중 정권 들어서부터 올해 10월 31일 현재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911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한상렬 상임대표는 국보법 폐지 없이는 진정한 인권도, 참된 민주주의도, 실질적인 민족 화해와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보법 폐지 투쟁의 깃발을 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사법부는 범민련과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철회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돼≫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만이 사면권을 발휘해 사면시킬 수 있다≫며 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10일간의 인권주간 일정에 대해 박유순(자통협) 사무차장은 이 기간동안 국회 앞 24시간 철야 1인 시위와 함께 서울 전역에서 ≪거리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며 이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 국민행동의 날(12/1 오후 2시 영등포역 광장) ▲통일대축전 참가 구속자 전원무죄석방과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대회(12/8 오후 3시 서울역)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테러방지법 저지 결의대회(12/10 낮 1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해 대표단들을 에워싸는 등 10여분 동안 막아 나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려는 대표들과 참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곧 기자회견은 국회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종린 상임의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높아 국보법 폐지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듯 했고 각 단체별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던 한계를 넘어 연대투쟁을 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30

≪국보법은 죽이고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국보법은 죽여야 하고 테러 방지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 영등포 역 앞에서 ≪반인권·반민족·반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의 결의를 다졌다.

박석운(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홍근수(자통협)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국보법의 존재는 ▲반인권 국가 ▲반민주 악법 ▲6.15공동선언 정신 정면 배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보법의 존재는 북한과 화해와 통일을 얘기할 수 없게 한다며 따라서 국보법은 통일을 지향 할 수 없게 하는 법으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오헌(민가협) 공동의장은 이 땅에 국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과 부의 기득권을 영위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과 ▲이 땅을 외세가 강점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보법이 없으면 미군도 있을 수 없다며 먼저 국보법을 없애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면 외세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테러방지법 입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전반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이 법의 입안을 기필코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국보법은 죽여야 하고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박영옥(민가협) 부의장의 ≪국가보안법 치욕 53년의 역사를 끝장내자!≫라는 내용의 결의문 낭독으로 본 집회는 마무리됐다.

집회를 마친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영등포역-여의도-한나라당사앞-국민은행까지 평화행진을 했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회당 회원의 사회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서울연합 이중원 집행위원장, 서울시립대 박성준 총학생회장의 규탄연설이 있었다.

규탄연설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보법 철폐≫를 위한 상징의식으로 ≪국보법 화형식≫을 가졌다.

화형식 후 참가자들은 국민은행 앞으로 이동해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정리 집회를 가졌다. 정리집회는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연대투쟁으로 국보법을 철폐시켜 사상의 자유를 이루자는 내용의 연설로 마무리됐다.

이날 본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사전집회를 갖고, 자주민보 사건과 8.15 평양대축전 구속자 그리고 한총련 대표 등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나와 규탄연설을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철야 1인 시위가 진행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의 격려방문이 있기도 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2

안국동에서 국회까지 울린 평화의 목탁소리

불교인권위,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 위한 인권주간 선포



세계 인권선언 53주년을 맞아 불교인권위원회는 4일부터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를 위한 발원기도에 들어갔다.

불교인권위 진관 공동대표는 ≪세계 인권선언 53주년을 맞이해 한국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인권주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으로 선포한 이 기간 동안 ▲인권법당 기도 ▲종합청사, 국회 앞 1인 시위 ▲인권법당→국회 평화행진 ▲주말 종로, 인사동 순회 행진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법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선포 이틀째인 4일 오전 10시, 진관 스님과 설곡 스님은 목탁과 천고(天鼓)를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외우며 인권법당-천도교 수운회관-조계사-일본대사관-미국대사관-시청앞-서울역-공덕동 로터리-불교방송국-여의도-국회까지 4시간여 동안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국회 앞까지의 평화행진을 4번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진관 공동대표는 이번 행진에 대해 ≪법(국보법) 개정은 앉아서 말로 해선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렵지만 행진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관 공동대표는 ≪평화행진을 하다 서울역 근처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렇지만 쉽지않은 평화행진에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실상부한 법개정 운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설곡 스님은 ≪미국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곡 스님은 평화행진 후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5

≪112일간의 평양여행≫마친 방북대표 4인

평양대축전 범민련 방북대표 4인 보석으로 풀려나



112일간의 긴 ≪평양여행≫을 마치고 지난 8.15평양대축전 방북 대표로 참석했다 구속됐던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부의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이 4일 오후 5시 보석으로 석방됐다.

통일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 등 80여명은 이들의 석방을 축하하는 환영대회를 오후 6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개최했다.

이종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구속된 방북대표들이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남은 재판에서도 반드시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범민련은 통일을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방자들이 차례로 나와 소감을 밝혔고, 뒤이어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이천재(전국연합) 공동의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 공동대표, 정성희(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가족들을 대표해 김규철 부의장 부인, 그리고 같이 구속됐다가 먼저 보석으로 풀려난 강정구 교수가 환영사를 했다.

특히 김규철 부의장 부인은 ≪자랑스런 남편을 가져 행복하다≫며 또한 이번 일은 ≪통일의 앞길이 험난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고 밝히고 이후에도 ≪더욱 열심히 남편을 보좌할 것≫이라고 말해 환영대회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환영대회는 신창균(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의 만세삼창으로 정리됐다.

김규철 부의장은 석방소감에 대해 정부가 민족민주운동을 자기 의도대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더욱더 통일운동을 앙양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규철 부의장은 아직 남아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적이 없는데 이적단체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보석석방에 대해 김규철 부의장은 ≪이미 보석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를 거쳐 다시 받아들인 것은 정치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창(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은 임동규(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함께 석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이번 석방은 ≪개인이 아닌 범민련이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한청 회원을 비롯해 주의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8.15 평양행사와 관련해 반성적인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상봉 의장은 300여명의 방북은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재판과정을 통해 국보법에 의해 지탱된 분단구조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상봉 의장은 평양출발부터 오늘까지 111박 112일간의 긴 여정을 상기하면서 범민련은 11년 역사에서 이제 합법화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화(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평양의 그 기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잠자기 전에 늘 ≪룡성맥주≫를 생각했다며 좀더 성숙되게 통일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석방된 이들은 여느 방북대표들의 7박 8일간의 평양일정이 아닌 평양으로 출발한 날부터 석방되는 오늘까지 111박 112일간의 긴 평양일정을 이제 막 마치고 긴 여운을 간직한 채, 짧게는 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을 위한 힘겨운 투쟁과 길게는 범민련 합법화와 6.15공동선언이행이라는 앞으로 남은 과제를 위한 결의를 모았다.

한편 이종린 상임의장은 임동규 부의장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을 통해 곧 다시 보석신청을 할 것이며 이번엔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4

서울대에서 자행된 사이트 폐쇄

지금 서울대에서는 전국연합 사이트와 전농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단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저희는 종종 그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받고 올라온 여러가지 글 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부터 그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버에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접속이 되지 않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안당국에서 이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막은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벗어난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접속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문을 갖고 이 문제를 중앙 전산원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전산원에서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 조사단 (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서울대에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합법적인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데 그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전국연합과 전농의 사이트를 폐쇄시켜 버리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구 반동 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테러 조사단이 하는 일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이버 범죄자 색출에 앞장서야 할 조사단이 합법적인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보안법 위반자로 간주하고 그것을 막기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합법적인 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범죄자의 딱지를 하나씩 붙이고 다니라는 생각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전산원 관계자 들의 생각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한 마디 하면 바로 학교 구성원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모습을 보여주니 말입니다.

혹시 다른 학교나 단체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함께 싸워 나갑시다. 서울대 동아리 연합회는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단대와 연대하여 전산원과 경찰청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희대의 악법 국가 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서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산원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즉각 사과하라!!

경찰청은 합법적인 전국연합, 전농 사이트 폐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

반민주 악법 국가 보안법 철폐하라!!

서울대 동연

서울대 사이트 폐쇄 사건 경과 보고 및 입장

다시 전국연합과 전농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글을 올린 후 동아리연합회실로 많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기자분이 전화하셔서 경찰청에 사이트 폐쇄에 대해 전화를 해 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원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몇 달전에 경찰청(사이버 테러범죄 수사대 형사 유현경, 김경수 외 1인)에서 공문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IP 추적 결과, 서울대 전산실 2층에서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자료를 올렸다고 하면서, 문제의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를 물어보았더니 기밀이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가져가, 3주후에 컴퓨터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경찰청에서 전산원으로 전화를 해서, 당분간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산원에서는 전화를 한 사람이 위 3명의 형사 중 한 명일 것이라 생각하고 폐쇄했으나 오늘 확인한 바로 경찰은 그러한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명예훼손 운운하며 전산실에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전산원 관계자분들은 공문이 아닌 전화로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자신들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경찰 또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이상 사이트를 폐쇄할 이유가 없어 다시금 사이트를 열어 주었습니다.(오후4시 10분)

인권하루소식 기자분에 의하면 위 형사들과 통화를 했는데 자신들은 국가보안법 관련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산원 관계자분과의 말이 엇갈리는 등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공안 정국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시한번 경고합니다. 사이버 테러 범죄 수사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와같은 일이 다시한번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엇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발악하는 수구냉전세력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대 동연

밥 굶으며 인터넷 지키는 사람?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인터넷등급제 폐지 무기한 단식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밥을 9일째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밥을 굶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인터넷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 옆 한국통신 건물. 이곳에 한국 정보통신 정책의 사령탑인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인물은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다.

이 대표의 농성에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지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정말로 심각한 이 사람의 단식이유 - 인터넷등급제 폐지

이 대표는 정통부가 시행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통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겨울추위와 허기에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 신체에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작년부터 인터넷등급제를 반대하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다 최근에 정통부가 ≪음란≫성을 이유로 동성애사이트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것을 보고는 정보통신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단식농성을 결심한 것.

≪평범한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퇴폐등급으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조차도 철저히 배제된채 폐쇄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힘없는 민중들은 정보사회에서 또다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온라인에서조차 인권탄압이 저질러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등급제에 의한 소수자 사이트들의 폐쇄조치라고 말한다.

이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자, 민족예술인총연합, 인권실천연대, 참여연대 등이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정통부가 참여연대의 성명을 보고는 6일 관계자들을 만나자면서 태도가 변했다.

또한 4일 오전 사회민주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국농성을 돌입하면서도 ≪인터넷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이 대표의 단식농성이 서서히 사회적인 파급력을 나타내고 있다.

광화문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점심 때를 이용해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유인물 3천5백장이 벌써 바닥나 1천5백부를 더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애로사항도 있다. 미대사관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들이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해 야간에는 명동성당으로 거처를 옮겨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명동성당에는 인터넷등급제 폐지, 정통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45일 가까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인터넷등급제는 정보사회에다 국가검열체제를 도입하는 시초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장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등급제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사이버 인권탄압의 전주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넷등급제 반대투쟁이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투쟁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통부 장관 퇴진이 과도한 주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장관이 응당 퇴진해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정보통신 사회의 틀을 짜는 정통부 장관이 정보화사회의 인권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을 사업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가 정보사회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마인드를 지녔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인권과 정보사회의 상관성을 책임있게 규명하고, 온라인상에서도 국민의 인권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통부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보기엔 정통부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

≪정보사회와 인권 마인드 없는 정통부 장관 물러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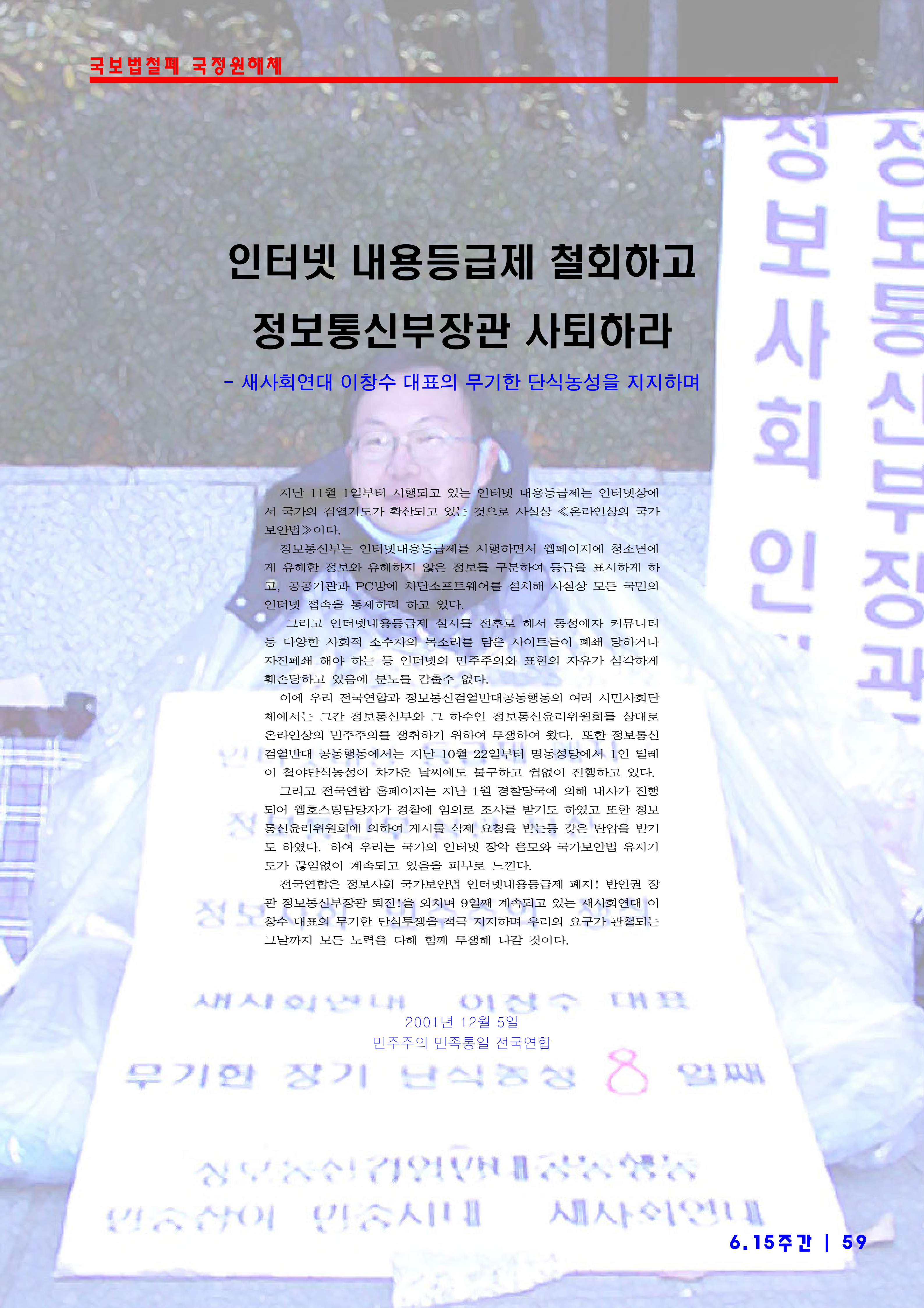
≪정통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주장만 강변하려고 하지, 자기들 이외의 네티즌과 정보운동 사회시민단체의 의견을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통신 관료집단인 정통부의 현실입니다.≫



겨울추위, 허기와 맞서며 인터넷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이 대표. 그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정통부 관료들은 ≪인터넷등급제가 온라인의 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죽이며, 사이버 검열의 잣대로 작용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준희 기자

2001년12월05일 ⓒ 디지털말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회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사퇴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상에서 국가의 검열기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온라인상의 국가보안법≫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웹페이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유해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PC방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실상 모든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전후로 해서 동성애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사이트들이 폐쇄 당하거나 자진폐쇄 해야 하는 등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음에 분노를 감출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연합과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간 정보통신부와 그 하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온라인상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또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쉽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연합 홈페이지는 지난 1월 경찰당국에 의해 내사가 진행되어 웹호스팅담당자가 경찰에 임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하여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는등 갖은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하여 우리는 국가의 인터넷 장악 음모와 국가보안법 유지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전국연합은 정보사회 국가보안법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반인권 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외치며 9일째 계속되고 있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12월 5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우리 민중은 왜 이리 처참한가≫

시위대-경찰 종로에서 유혈충돌
민중대회 참가자 2만명 종로 집결



≪민중들은 처참하다≫

≪농촌 다 죽어간다. 마음도 불안하고 허전하고 답답해서 나왔다. 쌀값이 똥값이다. 최소 40킬로그램 한가마에 6만원 이상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년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강윤중 씨, 농민 60세)

≪올해 말까지 명예퇴직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35% 정도 자른다고 회사쪽에서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정부는 맨날 구조조정하면 경기회복 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잘려 나갔나. 지금 나가면 뭐하면 먹고 사나.≫(이길호 씨, 노동자 37세)

≪월드컵 한다고 노점상 치우라고 하데요. 그래, 어디로 뭘 먹고 살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러댔더니, 위에서 시킨대로 할 뿐이라고 하더구만요. 남편도 없고 애들 둘 이걸로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영순 씨, 노점상 46세)

12월 첫 번째 일요일인 2일 오후.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노동자와 농민, 빈민, 학생 등 2만 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농업, 교육 정책 등을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학로와 을지로 5가 훈련원 공원, 종로 탑골공원과 동국대 등에서 각 부문별로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통해 오후 3시30분께 종로 종묘공원으로 집결했다.

3시40분께 집회 참가자들은 종묘공원입구에서 농민들이 가져온 쌀가마와 벼, ≪WTO반대≫와 ≪구조조정 저지≫ 등이 씌여진 밀랍 인형 등을 태우는 화형식을 가졌다.

4시께 종로 3가 네거리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에 충돌이 발생, 양쪽에서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민중대회 본대회는 예정보다 늦은 오후 5시께 약식 집회 형식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내몰려 생존의 벼랑끝에서 신음하고 있고, 농민들은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커지는 빚더미에 깔려 절망속에 갇혀 있다. 또 빈민들은 폭력 철거와 단속에 생존의 벼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자본과 이에 빌붙은 자본과 정권에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리는 ≪쌀값 폭락과 구조조정 등으로 민중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 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6시 30분께 각 부문별, 지역별로 마무리 집회를 갖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과 노동자 농민 수십명 부상

종로 3가 네거리 인근에서는 오후 4시께부터 종로쪽으로 진출하려는 농민과 노동자 200여명과 이를 막는 경찰이 첫 번째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종로경찰서장 차량(서울 30가 55XX)의 앞 유리가 부서졌고 시위대와 경찰간 대나무와 각목, 곤봉과 방패 등이 난무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양계룡(경북 의성, 60)·변의길(경북 봉화, 53)씨 등 농민과 대학생, 그리고 전의현(20) 이경등 경찰 수십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4시 15분께 종묘공원 앞 도로 8차선을 완전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은 종각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두 번째 충돌했다. 시위대는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돌맹이를 던지고 경찰은 곤봉과 방패 등으로 맞서면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4시25분께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작전이 시작되면서 일부 농민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고 얼굴 부위가 크게 다치는 등 양쪽간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어 도로 주변 인도에서 경찰과 집회를 구경하는 시민 사이의 몸싸움과 실랑이도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1시, 노동자 · 농민 · 빈민 · 학생 등 서울 각 지역에서 부문 행사 개최

이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와 농민·빈민·학생 등 2만여명은 서울 종로 마로니에 공원과 을지로 5가 훈련원 공원·종로 탑골 공원·동국대 등지에서 각 부문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일대에서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연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은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주5일제 근무제를 올해 안에 입법화 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막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을지로 5가 훈련원 공원일대에서는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덮어놓고 농사 짓고, 정부에 덮어놓고 쌀값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민족의 식량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쌀농사를 지켜왔다≫면서 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경남 산청에서 농사일을 한다는 양정석(35세) 씨는 ≪쌀값이 인정이 안되더라도 직접 지불을 확대해주면 그래도 괜찮다. 정부는 농민들이 그렇게 직접 지불 요구해도 아무 말 안하다가 올해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대구 염색 산업단지에서 일한다는 배정환(39세) 씨는 ≪농민들의 쌀값 보장요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등은 모두 사회 총체적인 문제들이다. 당연히 모두 힘을 합쳐 싸워야 된다≫면서 ≪대구사람이긴 하지만 DJ가 좋아 지난 선거에서 찍었다. 노동자, 농민의 친구라 하며 집권을 했지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종철/이종호 기자 ohmynews@ohmynews.com





민중연대 국회앞 닷새간 노상 철야농성

반민주악법 저지, 아프간 파병 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농성이 줄을 잇고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게 또다시 구조조정의 한파와 쌀값 동결, 노점상 철거와 같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들의 정부를 향한 종합적인 규탄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2일 전국민중대회에 이어 민주노총, 전농 등 20여개 단체들을 포함한 민중연대는 ≪반민주악법 저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5일간 국회앞에서 노상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중연대는 4일 오전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와 쌀생산비 보장 등 그동안의 요구가 정당의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시국농성을 통해 국민적 요구를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의 면담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는 또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와 인권침해로 이어지며, 한국군 파병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으로 인해 사회전반의 보수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분리, 철도 민영화 법안, 각종 재벌개혁 관련 후퇴조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움직임≫이라고 규탄했다.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은 ≪도로정책 30년을 펴오다 철의 실크로드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철도를 해외에 매각하려는 철도구조개혁기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때는 즉시 1백32개 철도지부가 단결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투쟁기금마련과 비상연락망 등 총파업에 대한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용기 부의장은 ≪정부가 대북지원 3백만섬을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의 쌀수입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농촌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파괴하는 가스, 철도 민영화 정책에 민주노총은 조합사업장과 연대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노점상연합 김흥현 회장은 ≪월드컵 개최로 노점상 단속재정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외국인들은 민중의 삶과 숨소리, 그리고 뒷골목을 찾아오는 것이며, 노점을 풍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발과 철거마을, 노점상은 사회의 마지막 자구적 안전망이지만, 이들에게마저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사회의 치부를 덮어버리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중연대 회원들이 천막을 치려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철도노조 서울지부 황정우 조합원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명 부상을 입어 용산 중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시국농성 요구사항≫

1. 아프칸 파병동의안 처리와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2. 쌀생산비를 보장하고 개방농정을 철폐하라.
3. 철도 등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한다. 철도, 가스구조개선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4.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하라.
5. 국가보안법과 인터넷등급제 등 반민주제도악법을 철폐하라.
6. 영세노점상 단속을 중단하고 공공촵영구임대주택 등 빈민생존권을 보장하라.
6. 건강보험 재정 분리 반대한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폐기하라.
7.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개혁입법을 즉각 단행하라.
8.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육재정 6%를 보장하라.
9. 공무원촵교수 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전면보장하라.
10.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고 언론개혁 단행하라.

문선영 기자 rhythmical@ngotimes.net
시민의 신문

대안정치세력 진보연대 공감

양대노총 · 전국연합 · 한총련 민주노동당 총집결
푸른정치 · 자치연대 · 녹색당도 ≪공동브랜드≫ 움직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 재야 · 시민단체들 연대를 모색이 한창이다. 특히 이들은 자치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 · 진보세력이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사회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진보세력을 결집하는 재창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노동운동의 또 다른 축인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총련 등이 참여했다. 전국연합 전국 지역조직 상당수가 민노당에 합류를 선언한 상태이고 한총련 또한 공식적으로 민노당 가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총련은 특히 민노당 가입을 주목하는 이유와 관련, ≪민노당이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민중연대 · 통일연대 등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강화하면 위력적인 민주민족연합전선체 건설의 합법적인 주체세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계급을 대변하거나 소수 정파라는 이미지로는 유권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진보진영의 후보가 나뉘어 나가는 것은 치명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것에 주목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한 자치참여를 주창하고 있는 자치연대와 푸른정치연대도 이러한 진보진영의 움직임에 발맞춰 ≪개혁신당≫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연대를 이룰것인가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자치연대는 진보세력이 전국적인 연대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변화와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다.

푸른정치연대 도천수 대표는 ≪민노당 · 전국연합 등 진보진영이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현실정치에 대항하는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한다≫며 ≪푸른정치연대 · 재야 등 개혁세력 그룹도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신당 창당때까지는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제도권 개혁 세력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광역의회와 기초단체장에 진출해있는 자치연대와 기초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등도 개혁세력 및 녹색후보와 연대하면 충분한 대안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게다가 내년 광역의회 선거가 1인2표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대안정치세력들의 연대에 탄력이 붙고 있다.

녹색자치를 표방하며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그룹들도 내년 자치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생명존중, 생태주의 사회건설, 비폭력 평화운동 등 4가지 녹색이념을 내걸고 이에 부합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녹색연합은 정치와 시민운동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녹색이념을 표방하는 그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seol@ngotimes.net
시민의 신문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1일～2일



이번엔 자애로운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남 민중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정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현규씨 모셨어요.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 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과 북의 많은 분들이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면서부터 이땅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이 파다하게 퍼졌잖아요. 그 얘기 속에서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우리 이남민중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도 널리 퍼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중들속에서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흠모심과 경모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남 민중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제가 지난 추석때 고향에 가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모여앉으면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을 기본 화제로 하더라구요. 고향 사람들의 이처럼 달라진 모습을 대하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되면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 고향 친구 한분이 남북농민통일대회에 갔다 왔기에 한 이틀밤 같이 지내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막 가슴이 탁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사회자 : 돌이켜보면 이남 민중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조국을 광복시켜 주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고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남민중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이남 민중들을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죠.

김현규 : 네, 그렇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늘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나더러 이젠 연세도 높은데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권고하곤 하는데 어디 형편이 쉬게 되었는가.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시인들 쉴수가 있겠는가. 나는 조국이 통일되면 십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

고 뜨겁게 말씀하시곤 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은 비록 북반부에 있으나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있다고, 우리는 한시도 남반부인민들을 잊을수 없다고, 남조선인민들 생각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남민중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셨습니다.

사회자 : 정녕 외세와 집권세력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는 이남민중들에 대한 경애하는 주석님의 심려는 끝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주석님께서는 이북민중들에게 행복을 돌려주시도록 이남민중들을 두고 더욱더 심려하셨다죠.

김현규 : 그렇죠. 그런 하많은 얘기들중에는 이런 가슴 뜨거운 얘

기도 있는데요. 그 얘길 좀 하죠.
어느해 겨울이였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어 조국통일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올해에 농사가 잘 되어 쌀풍년이 든데다가 어장에는 고기떼가 와글와글하여 물고기풍년까지 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동해안에 폭이 한 3천미터나 되고 길이가 약 5천미터나 되는 명태떼들이 와글거린다고 하시던 그분께서는 문득 말씀을 끊으셨답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주석님께서는 심려어린 음성으로 ≪그런데 참 걱정이오.≫라고 조용히 뇌이시더랍니다.
순간 경애하는 주석님의 교시를 접하던 일군은 아마 수산부문지도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 하지 못했거나 물고기잡이와 관련한 문제에서 난관이 제기된 것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남조선 어장에는 물고기가 없어 요즘 어민들이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생계를 이어 가겠소.≫

라고 걱정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사회자 : 이북의 어장에 욱실거리는 물고기떼를 보고도 어장의 물고기가 없어 잡지 못하는 이남 어민들의 가긍한 처지를 생각하시며 그토록 걱정하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숭고한 동포애의 정이 한없이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네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1965년 여름 어느날엔 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기상**국부문의 한 일군은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밤늦게 몸소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주석님께서는 그 즈음 예년에 없는 왕가물이 계속되는 것이 걱정되시어 자주 날씨변동정형을 알아보곤 하셨는데요. 이날도 그분께서는 지금 날씨가 흐렸는데 어디서 오는 저기압인가고 물으시더랍니다.
그 일군이 내몽고쪽에서 오는 저기압이라고 대답을 올리자 주석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서운한 음성으로 ≪남쪽에서 저기압이 아니구만.≫하고 뇌이시더랍니다.
사실 계절로 보면 남쪽 저기압이 밀려와야 했고 그래야 비도 많이 내릴수 있는 것이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 일군은 ≪그래도 내일부터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석님께서는 ≪내일부터 비가 온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얼마나 올 것 같은가고 다우쳐 물으셨다고 합니다.
5밀리내지 10밀리정도 내릴 것같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분께서는 그만큼이라도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번 저기압이 우리나라 전반 지역에 다 미칠 것같은가고 다시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기압세력이 약해서 중부 조선까지 미칠 것같다는 대답을 들으신 주석님께서는 무거운 음성으로 ≪곤란하구만.≫하고 조용히 뇌이시더니 ≪저기압이 중부 조선까지만 미친다니 야단이오. 남녘동포들도 밥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야 일군은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이북 지역에만 내리게 되는 것을 주석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와 하신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답니다.

사회자 : 물고기떼 욱실거리는 이북의 어장을 두고도 물고기가 없어 잡지 못하는 이남 어민들을 걱정해 주시고 예년에 없는 왕가물이 계속될 때에는 또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심려를 놓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정말 온 민족에게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네, 옳습니다. 참으로 이남민중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심려와 노고는 끝이 없으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지난 6.25전쟁시기 서울이 가까운 과일군(당시 통화군)에 **과원을 조성하고 조국이 통일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실과를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몸소 실과 나무묫까지 마련해 보내주신 분이 경애하는 주석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북에서는 하나의 공장이나 한채의 주택을 짓고 양고기나 강철, 옷감의 생산지표를 설정하시어도 언제나 우리 민중의 몫까지 생각하시곤 했습니다.
사회자 : 그뿐 아니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외세의 예속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파산에 처한 이남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이남민중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울이신 노고 또한 헤아릴수 없지 않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의 발기에 의해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는 북남조선의 경제, 문화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데 관한 의견서가 채택, 발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3기 제3차 회의에서는 매해 200만섬의 쌀, 10만톤의 강재, 15킬로와트의 전력 그리고 방대한 양의 화학섬유와 **, 시멘트, 목재, 기계류들을 이남에 제공할데 관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남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바치신 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중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지체없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숭고한 동포애적 조치에 따라 아직 이북민중들이 생활도 넉넉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이남의 수백만 **민들과 이재민들에게 구제물자를 보낼데 관한 내각결정 등이 여러번씩이나 채택, 발표됐었답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의해서 1984년에는 온 겨레의 크나큰 관심속에서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70만톤, 의약품 14종의 759**의 방대한 양의 구조물자가 폭우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우리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수난속에 헤매는 자기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심정 그대로 자기들을 죽음의 나락에서 구원해 주시던 경애하는 주석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덕을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우리 민중인 겁니다.
사회자 : 네, 옳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남민중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을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죠.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민중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그분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민족사에 길이길이 전해갈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하늘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주석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겨레의 영원한 하늘, 겨레는 영원히 그 존함 부르며 살겁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외세의존은 영구분열

기성철 / 구국전선 제461호, 주체90(2001)년 12월 1일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근본핵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자주는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이며 자주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 수 없다. 민족자주는 애국애족이자 조국통일이며 외세의존은 매국배족이자 영구분열이다.

민족자주는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각과 의지이다. 이와 반대로 외세의존은 자기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고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아주 어리석은 사고방식이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조국통일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조국광복후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도록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외세에 의해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다.

우리 조국강토와 민족을 갈라놓은 외세가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이다.

민족자주를 떠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말하는 것은 허위, 기만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얻을 것이란 지배와 예속이며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 뿐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대사가 증명해 주는 진리이다.

민족자주야말로 우리 겨레가 살고 통일번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애국애족의 길이며 외세의존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영구분열의 길이다. 진정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가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자면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외세의 간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미국이다.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이남땅을 강점하고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면서 극우익보수세력을 반통일에로 부추기고 있다. 부시정권은 있지도 않은 이북의 ≪위협≫설을 떠들면서 한반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 있으며 군부를 반북대결에로 내몰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는 것은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여건으로 된다.

민족자주를 실현함에 있어서 절실한 과제로 나서는 것은 또한 외세의존세력을 배격하는 것이다.

외세의존은 민족내부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주되는 화근이며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고 조국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패거리를 비롯한 극우익보수세력들은 앙양되는 자주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외세와의 ≪공조≫를 구걸하고 있다.

우리는 외세에 빌붙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자들의 반통일분열주의적 정체를 폭로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철퇴를 안겨야 할 것이다.

백두의 총대바람

허리치는 눈길속
하늘땅을 휩쓰는 누보라
뼈속까지 스며 드는 강추위
태고연한 백두밀림 혁명전적지들
그이께선 련 3일째 찾고 찾으시여라

청봉, 베개봉, 무산지구...
다가서는 한그루 구호나무에서도
투사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시며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갈 불 타는 신념으로
우리 장군님 헤쳐 가시는 백두의 눈보라길

그 길엔 뜨겁게 어려 있어라
비록 총성은 울리지 않았어도
90년 대 헤쳐 온《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에
우리 이겨 낸 《쳐창즈》의 굶주림도
간고했던 《소왕청방어전투》도
수령결사옹위의 《7련대 나팔소리》도
충신과 배신이 갈라 지던 41년도의 바람도...

그 길엔 긍지높이 새겨 져 있어라
조선은 다 굶어 쓰러진다고
온갖 원쑤들이 너털웃음 지을 때
세계를 놀래운 인공지구위성의 발사
쎄빌랴상공에 존엄높이
《세계마라손녀왕》이 휘날린 공화국기발
북남 삼천리가 울고 웃으며 신념의 강자
민족의 장한 아들들을 맞이한 세계사적 사변

아, 가장 준엄한 시기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빨찌산의 녀장군 어머님의 당부를 지켜
언제나 빨찌산의 아들로
백두의 눈보라를 총대바람으로
앞장 서 일으키신 우리 장군님

원쑤들은 계산 못했다
이 땅에
큰물지고 가물에 타는 논밭은 계산했어도
백두산장군이 일으키는 총대의 무게
무적필승의 보검 백두의 총대바람은

하기에 오늘도 우리 장군님
이 땅 수천만 아들딸들 심장에
백두의 총대바람 끝없이 안겨 주며
백두의 눈보라길 걸으시나니

아, 강성대국건설도
조국통일 새 아침도
장군님 의지와 신념으로 안아 올
백두의 총대바람이여

주체 90, 11월 28일

아주대학교의 학생단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원의 학원공작음모를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교원정년연장을 반대하며 **, **를 주장하는 사립학교법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한나라당이 현실적으로 공교육정상화처방이 결코 될수 없는 교원정년연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는 만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때 한나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사회단체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반대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6일 결혼식을 앞둔 한총련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한총련산하 경인총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느니 뭐니하며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죄와 집시법위반죄라는 죄아닌 죄를 씌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횡포를 감행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원회가 26일 오후까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결과 모두 122건에 달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중학교 학부모들이 폭언을 일삼고 있는 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27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당직자간담회에서 당직자들의 대통령출마권유에 자민련 창당기념일인 내년 1월 15일에 결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물러났어야 할 5.16쿠데타의 주역이고 유신잔당인 김종필이 아직도 대권야망을 꿈꾸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제라도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교원정년연장을 반대하는데도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기존의 강령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회창의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27일 주요당직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회창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과 경기지역업체들이 임금을 주지않아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인천과 경기지역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25억원보다 3배이상 늘어난 4,31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5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5,000여명보다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체 90, 11월 29일

여성단체연합 김모씨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교원정년연장법안에 대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단체들은 한나라당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원정년연장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교육문제를 당리당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상이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교원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 600명과 교수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교원정년연장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65.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교사는 55.2%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개혁성향 초선의원모임인 ≪새벽21≫은 28일 모임을 갖고 교원정년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대선전략차원에서 교육과 민족문제를 반개혁적으로 추진시키려 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부시가 이북에 강경메세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 주목한다느니 뭐니하며 북은 대량살상무기개발과 확산을 중지하고 사찰에 응하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떠들며 북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에 가세하는 용납못할 망언인 것입니다.

부시는 27일 이북에 대해 대량파괴무기개발과 확산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북은 대량파괴무기개발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느니 대량파괴무기를 생산해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경우 대량파괴무기개발국가도 테러리스트와 다를바 없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북을 이른바 테러지원국명단에 올려 놓고 아프간보복전쟁이 끝나면 이북을 비롯한 테러지원국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며 대테러전쟁을 확대하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도 대테러전쟁을 감행하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대변인이 이를 추종해 나선 것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에 대해 운운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각계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재야인사 김모씨는 미국이 북의 이른바 인권문제니 종교문제니 뭐니하면서 계속 북을 공격하다 못해 이제는 북이 대량살상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억지를 쓰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로써의 미국의 파렴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운운하고 있는 북의 이른바 인권문제니 종교문제니 테러지원국이니 하는 따위의 문제들은 북을 고립압살해 보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테러지원국문제만 봐도 이북은 테러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국제무대에서 여러번 표명했으며 지금도 그 이행에 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테러왕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의 처지에서 북을 테러지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이라고 떠들다못해 대량살상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을 들고 나온 것은 북의 내정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 아닐수 없다. 이는 또 전제조건없는 대화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는 미국의 진의도가 북미대화가 아니라 북을 힘으로 압살하려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조건없는 북미대화의 마당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한국전력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는 경수로건설이 무한정 연기된 책임은 전적

으로 미국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기본합의문에는 미국이 2003년까지 이북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는 전적으로 애초부터 이북을 힘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어리석은 망상이고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이북이 해마다 막대한 전력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북이 해마다 입고 있는 막대한 전력손실을 미국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견지에서 볼때에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전력손실보상에 대한 북의 정당한 요구를 성근히 받아들일 대신 적반하장격으로 북이 먼저 사찰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강도적 요구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이북을 힘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전력손실보상에 대한 북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북미기본합의문이행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할줄 안다.》

주한미군소속 헬기들이 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저공비행을 해 인삼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대북적대시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주체사상을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주체 90, 11월 30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모기업사장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정치의 대가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한총련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농업분야에 대한 수입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해 11월 21일 성명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가 11월 29일 오후 부분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의 《내용등급제》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한, 미, 일 세 나라는 이북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핵의혹해소를 촉구했습니다.

한, 미, 일정부대표들은 1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른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가 끝난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 미, 일 세 나라가 대북공조로 또다시 핵소동을 일으켜 이북을 고립압살하려는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아프간에서 대테러전쟁을 강행하는 한편 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 올려놓고 테러지원국들에 대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당국자들이 미국의 이같은 대북강경정책에 추종해 북의 핵의혹을 운운하며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계책이라 하겠습니다.

한, 미, 일의 이같은 책동으로 한반도에는 전쟁기운이 감돌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족법률가협회가 일본의 우익반동단체들이 납치의혹문제를 가지고 이북을 비상중상하는 놀이를 벌인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11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1일

한민전 대변인은 6.25전쟁시기 미군이 이땅에서 생물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또 드러난 것과 관련해 11월 30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하생략)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최근 미국이 강압과 억지로 이북을 걸고들면서 한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11월 28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노조는 계속해 야간조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파업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일부 직원이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의지에 불만을 품고 집단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모과장 등 4명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사표제출이유설명서를 통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치공작이나 탄압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등 의지가 너무 미약해 활동의 한계를 느껴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가 지난달 28일 각계층 민중 1,530명을 상대로 《이회창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회창은 하루빨리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군의 대테러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파병되는 국군의 규모는 150여명의 의료지원단, 4,500톤급 상륙함1척과 200명가량의 해군수송지원단, **130수송기 4대와 150명가량의 공군수송지원단 등 모두 500명가량입니다.

국방부는 의료지원단에는 15에서 30명의 해병대가 따라 가며 국회동의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12월중순부터 파병해 내년 말까지 1년 1개월동안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보복전쟁에 대한 파병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11월 30일 성명을 발표해 조총련 중앙본부와 지방본부들을 강제수색한 일본당국의 폭거를 규탄했습니다.

조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조총련을 사수하기 위해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일본수사당국이 조총련중앙본부와 조총련도쿄도본부, ****본부에 대한 강제수색을 벌이려하자 1천여명의 조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중앙회관안팎을 꽉 메우고 조총련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단호히 반대한다, 부당한 정치탄압 중지하라는 구호들을 외치며 일본수사당국의 수색소동에 견결히 맞서 싸웠습니다.

조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중앙회관정문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일본수사당국이 기동경찰대를 들이밀자 군중들은 몸을 그대로 방패로 삼아 경찰들을 정문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일본당국의 조총련탄압책동을 반대하는 조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투쟁은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